

# 동북아 역사 포커스

NORTHEAST  
ASIAN  
HISTORY  
FOCUS

제7호 | 2023 겨울

포커스 I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포커스 II 한중 관계 갈등·교류·협력

동북아역사포커스 제7호 (2023 겨울)

---

Northeast Asian History Focus(Vol. 7 Winter 2023)

## 동북아역사포커스

제7호 2023 겨울

발행일 2023년 12월 1일  
등록번호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발행인 이영호  
발행처 동북아역사재단  
편집위원장 김현철  
편집위원 김종근, 위가야, 이동욱, 조건, 조윤수, 차재복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44  
팩스 02)2012-6186  
구독 문의 및 독자 의견 nahfocus@nahf.or.kr  
제작·인쇄 역사공간

ISSN 2950-9696

『동북아역사포커스』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www.nahf.or.kr](http://www.nahf.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록된 글은 필자의 견해이며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의 글 김현철 동북아역사포커스 편집위원장 4

특별기고	<b>중간지대에서 제3극으로: 한국전쟁 정전 후 중국의 자기인식과 대외정책</b> 8 유용태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명예교수
------	---

특별기고	<b>새로운 중미 관계 프레임 속 한중 관계: ‘한국식 모델’의 형성, 특징, 전망을 중심으로</b> 20 스위안화(石源華) 푸단대학(復旦大學) 석좌교수
------	--

포커스 I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b>미중 갈등과 동북아 신질서, 그리고 한반도 문제</b> 34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b>21세기 새로운 중일 관계: ‘중화 부흥’과 ‘일본 부흥’의 상호 인식</b> 44 차재복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b>중러 관계와 한반도</b> 63 최덕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포커스 II 한중 관계 갈등·교류·협력	<b>2023 한중 관계의 현황과 전망</b> 76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b>한국과 중국은 왜, 역사와 문화로 충돌할까?</b> 86 김인희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사연구소장
	<b>인문교류, 경제·안보 연동 시대 한중 관계 개선의 해법</b> 97 장호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현지통신	<b>중국의 역사정치와 한중 관계</b> 109 신경진 중앙일보 베이징총국장
------	---

체험! 역사현장	<b>한중 따오기 교류의 현황</b> 122 김성진 창녕군 관광환경국 우포생태따오기과
----------	--

동아시아의 오랜 역사를 같이해 온 중국과 한반도의 변화 추세를 볼 때,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현재까지 양국은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경쟁과 갈등뿐만 아니라 교류와 협력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중 간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21세기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제7호에서는 동북아와 한중 관계의 과거·현재·미래(1953~2003)의 역사·문화 문제를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양국 간 갈등과 현안에 어떻게 대처하며, 교류와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어떻게 이끌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특별기고」에서는 한중 관계의 변천에 대한 양국의 역사인식과 그동안 정부 차원의 접근 과정을 양국 전문가의 글을 통해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과거 역사와 현재의 대외정책에 대한 해석의 차이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우선 양국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한국 측과 중국 측의 견해를 보여주는 글을 「특별기고」에 신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용태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명예교수는 한국전쟁 정전 이후 중국이 미국과 구 소련 사이에서 중간지대로서 제3극을 이루어 균형을 추구해온 삼각외교를 펼쳐왔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대외관계상 주변 국가에 대한 포위공포증이라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를 활용하는 지혜와 전략적 사고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측 입장을 보여주는 예로서 스위안화(石源華) 중국 푸단대학(復旦大學) 석좌교수는 한중수교 이후 한국이 대미·대중 정책에서 균형전략을 취해온 과정을 중국과 미국 간의 중간국가로서 ‘한국식 모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교전략으로는 중미 관계의 개선과 대응을 전제

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상대국 전문가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양국이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추어 상대국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과 교류·협력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한 점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포커스 I」에서는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반도’라는 주제하에 미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변화에 따라 한중 관계가 영향을 받고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모습을 전문가들이 현재 한중 양국이 처한 상황과 연계시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제정치 분야로서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전후 미중 관계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최근 미중 갈등의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는 한국의 국익과 안보상황은 한반도에 대한 미중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수렴시키는가에 달려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일 관계 분야로서 차재복 재단 연구위원은 역사상 중일 관계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2010~2012년 이후 중국과 일본이 ‘부흥’을 내걸고 동아시아 주도권을 둘러싼 전략경쟁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한중일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러 관계 분야로서 최덕규 재단 연구위원은 중러 간에 체결된 러청 동맹조약(1896)과 중소동맹조약(1950) 및 한국전쟁 직전 스탈린(Joseph Stalin)과 마오쩌둥(毛澤東)의 빅딜은, 대륙과 해양세력의 이해가 교차하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러시아의 부동항 확보를 위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 II」에서는 ‘한중 관계 갈등·교류·협력’이라는 주제하에 한중수교 이후부터 현재까지 양국 간 대립 및 갈등을 겪고 있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정치·외교, 역사, 문화 등 분야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양국 관계 31년을 돌이켜보면 현재 양국 간 인식의 차이가 보이며, 정치·외교 분야 및 국민 감정의 악화 등 새로운 갈등 요소를 점검하여 한중 양국이 상대를 인식하는 데 균형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인희 재단 한중관계사연구소장은 한중수교 이후 양국 간 교류·협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동북공정’ 등 역사 문제에 분노하고 중국은 ‘단오 논쟁’ 등 문화 문제로 분노하게 된 과정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역사와 문화의 갈등 및 충돌 현상의 해소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호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비롯, 최근 중국인들의 한국 이미지와 관심도를 사례로 들어 개인 또는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교류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경색된 양국 관계의 물꼬를 트는 방안으로서 인문교류를 추진하고 다양한 교류 플랫폼을 활성화시키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지통신」에서 신경진 중앙일보 베이징총국장은 중국 단둥의 항미원조기념관과 거리 풍경, 선양의 열사능원, 베이징의 중국국가박물관, 중국역사연구원 등 중국 내 한국 관련 기념관과 전시 내용, 변화된 모습 등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면서, 현지에서 바라본 소감과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험! 역사현장」에서 창녕군 우포늪 따오기복원센터와 김성진 박사는 한국에서 멸종된 따오기를 중국 산시성 따오기복원센터와 오랜 우호교류를 통해 기증받아 경남 창녕군에서 따오기 복원사업을 추진해온 과정의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중 양국 간 우호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관, 나아가 한중일 3국 간 교류·협력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 실린 글들이 독자들께 1953년 한국전쟁 정전 이후 한중 관계, 특히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양국 관계의 변화와 현재 각 분야에서 직면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좀더 교류·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중 양국의 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뿐만 아니라 학생과 시민 등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이 좀더 활발하게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동북아역사포커스 편집위원장  
김현철

## 중간지대에서 제3극으로 한국전쟁 정전 후 중국의 자기인식과 대외정책

유용태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명예교수

올해 7월로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이 지났다. 양측이 승패를 가르지 못한 탓에 정전상태가 이토록 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이야말로 전쟁의 승패를 가르지 못하게 만든 중대 요인이다. 중국은 무기와 국력의 현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 미국에 맞서 붕괴 직전의 북한 정권과 자국을 방어하고 사회주의 진영을 지켜냈다.

이로써 한국전쟁은 갓 출범한 중화인민공화국(신중국)이 세계/동방의 정치대국으로 부활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전쟁을 발판으로 형성된 중국의 자기인식과 대외정책은 냉전기 중국 대외전략의 골간을 이루어 1972년 미일과의 국교정상화 시점까지 이어졌다. 이에 대한 검토는 미중 ‘신냉전’의 우려 속에 바람직한 한중 관계를 모색해야 하는 우리에게 모종의 시사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국전쟁을  
발판으로 형성된  
중국의 자기인식과  
대외정책은 냉전기  
중국 대외전략의  
골간을 이루어  
1972년 미일과의  
국교정상화 시점까지  
이어졌다.

## 1. 한국전쟁과 ‘강한 중국’의 부활: 중간지대의 영수, 동방의 금성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은 그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바람에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고 북한 정권을 구원한다는 명분을 극대화했다. 그러나 마오쩌둥(毛澤東)과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은 세계혁명론에 따라 중국혁명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이를 모델로 하는 동방혁명을 지원한다는 의식을 갖고 참전한 것도 분명하다. 갓 출범한 신중국의 국가안보와 동방혁명을 상호 연결지어 추구한 것이다.

마오쩌둥은 1949년 봄부터 김일성에게서 중국혁명이 성공하면 “남조선 해방과 통일”을 위한 전쟁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 후 이듬해 봄까지 6만여 명의 조선인 부대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1949년 10월 21일 스탈린(Joseph Stalin)에게 전문을 보내 김일성의 “무력통일 구상을 취소케 해달라”고 건의했고, 스탈린도 이에 동의했다. 방문에 앞선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이 짙다. 두 달 후 마오쩌둥이 모스크바에 가서 스탈린에게 맨 먼저 꺼낸 화제도 중국은 휴식을 위해 3~5년의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마오쩌둥이 김일성의 구상을 지지하되 장기전쟁으로 망가진 중국 경제를 회복하고 정권을 안정시킨 후에 실행할 일로 여겼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950년 1월 말 마오쩌둥은 스탈린이 김일성의 선공에 의한 전쟁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파악하고서는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으니 사실상 묵인한 셈이다. 소련과의 상호우호동맹호조조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그해 4월에 스탈린이 김일성의 계획에 대해 중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승인한 것은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 이제 동맹조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만큼 마오쩌둥은 이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동

방-세계의 상호관계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인식과 전략에 따른 결정이었다.

우선 주목할 것은, 마오쩌둥이 1946~1947년 발표한 ‘중간지대론’이다. 이는 미소의 얄타(Yalta) 밀약으로 중국의 주권이 침해된 데 충격받아 미소 모순을 세계 정치의 주요 모순으로 보았던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면서 형성된 이론이다. 미소 사이에는 광대한 중간지대가 존재하며, 거기에는 중국을 위시한 자본주의·반(半)식민지 국가가 있는데 미국은 이를 복속시키기 전에는 소련을 침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련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서 미소는 서로 직접 공격하는 전쟁을 감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간지대를 둘러싼 미소 간의 쟁탈은 그 핵심인 중국의 향배에 따라 결정될 것이었다.

중공 기관지 『해방일보』는 1946년 5월 중국은 무산계급이 주도한 신민주주의혁명으로 “세계 반파시즘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국가의 하나”가 됨으로써 “동방 피압박민족 해방운동의 인솔자”가 되어 “동방의 금성”으로 떠올랐다고 자부하였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신중국이 세계/동방 피압박민족의 지도자, ‘동방의 금성’이 되었다는 자기인식이다. 중공 기관지 『해방일보』는 1946년 5월 중국은 무산계급이 주도한 신민주주의혁명으로 “세계 반파시즘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국가의 하나”가 됨으로써 “동방 피압박민족 해방운동의 인솔자”가 되어 “동방의 금성”으로 떠올랐다고 자부하였다. 항일전쟁 승리 직후 혁명중국이 마침내 동방민족의 영도자 지위에 올랐다고

본 것이다.

이는 중공의 자기인식일 뿐이지만 한국전쟁 참전으로 소련에게 공인 받게 되었다. 마오쩌둥은 1947년 후반부터 코민포름(Cominform)을 모델로 삼아 아시아 각국 공산당을 지도할 ‘동방정보국’을 건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스탈린은 국공내전에서 미국의 직접 개입을 불러올 것이라 우려했던 중공의 창장강(長江) 도하작전이 성공하자 1949년 7월, 세계혁명의 중심이 동방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동방혁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라고 고무하였고, 한국전쟁에 참전하자 1951년 5월 드디어 동방정보국 건립을 최종 승인하였다. 신중국은 사실상 ‘동방의 금성’임을 인정받은 셈이다.

동방정보국은 스탈린 사후 평화공존의 대외방침에 따라 건립되지 않았으나, 그 추진 과정에 보이는 중공의 인식과 전략은 이어졌다. 1950년 3월 4일 마오쩌둥은 전체 당원에게 “아시아 피압박 인민의 해방을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그때 중공 지도부는 한반도·타이완·인도차이나 세 곳에서 이른바 ‘중국 상실’을 만회하려는 미국과의 일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응하였다. 그해 초부터 베트남의 항프독립전쟁을 지원한 데 이어 한국전쟁에 직접 참전한 것은 동방혁명의 실천이었다. 베트남과 북한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완충국이어서 중국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필요도 컸다.

소련이 신중국에 동방혁명의 영수 지위를 부여한 것과 상응하여 미국도 중국관을 대폭 조정하였다. 정전 직후인 1953년 11월의 미국 국가안보회의 정책문서 NSC166/1이 이를 말해준다. “강대하고 엄밀한 기율을 갖춘 혁명적 공산주의 정권이 중국 대륙에 출현하여 극동의 권력구조를 극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소련의 영향력을 크게 확장하는 동시에 미국의

그것을 축소하였다.” 이제 미국도 ‘강한 중국’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 2. 봉쇄 속의 약진: 중간지대 전략

신중국에 대한 미국의 억제정책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전면적 봉쇄로 나아갔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실패한 중소동맹의 확장 시도가 동남아시아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1951~1954년 일본-한국-타이완-필리핀-남베트남-태국에 이르는 반달형 포위망을 구축하였다. 먼저 중간지대를 선점해 간 것이다. 미국은 탈식민화를 지지하면서도 반공을 우선하였기에, 이 반중 냉전 포위망은 동남아시아 피압박민족의 해방운동에 대한 억압과 연동되었다.

이에 맞서 중국은 ‘평화공존 5원칙’과 반제·반식민을 앞세워 포위망에 균열을 내면서 중간지대로 약진하였다. 이를 위해 아직 독립하지 못한 피압박민족의 해방운동을 지원하는 한편, 갓 독립한 자본주의 국가들을 전쟁에 대한 태도에 따라 적과 동지로 구분하여 중립을 지키는 경우 우방으로 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인도를 비롯한 중립국들이 전쟁의 확산을 막고 정전을 앞당기기 위해 유엔(UN)을 무대로 독립적인 외교를 펼친 데 자극받은 결과다.

‘평화공존외교’는 1954년 이후 1964년까지 이어졌는데, 약진의 첫 무대는 제네바회의(1954)다. 한국전쟁과 달리 베트남의 항프전쟁은 중국의 지원에 힘입어 디엔비엔푸(Dien Bien Phu)의 극적인 승리로 끝났기에 승패가 분명했고, 회의장에서 중국의 역할도 그만큼 컸다. 이때 중국은 프랑스를 대신해 미국이 베트남 문제에 직접 개입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호찌

민(胡志明) 정부의 반발을 누르고 타협책을 제시해 관철시켰다. 북위 17도선을 정전선으로 하고 2년 안에 통일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렇게 미소영프와 함께 5대국의 하나로 국제정치 무대에 등장하였다.

중국의 두 번째 외교무대인 반동회의(1955)는 인도 수상 네루(Jawaharlal Nehru)가 한국전쟁에 다수의 신생 약소국이 끌려들어 가는 것을 보고 미소 어느 진영에도 예속되지 않도록 하고자 비동맹중립주의를 제창함에 따라 탄생하였다. 인도와 함께 한국전쟁 정전을 위해 앞장선 국가들이 발기인 역할을 한 것도 눈에 띈다. 반동회의가 중국에 의해 이용될 것을 우려한 미국이 사전에 관련국들을 움직인 결과 각국 대표의 반중·반공 연설이 이어졌다.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이념과 체제가 달라도 이를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독립자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함이 아니냐”며 평화공존 5원칙을 강조하여 깊은 인상을 남겼다. 29개 참가국 중 22개국이 미국과 수교한 상태였는데, 4년 만에 그중 10개국이 중국과 수교하였다.

물론 중국의 ‘중간지대외교’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인도와의 갈등이 중인(中印) 국경에서의 무장충돌(1959~1962)로 이어졌고, 문

반동회의(1955)는 인도 수상 네루가 한국전쟁에 다수의 신생 약소국이 끌려들어 가는 것을 보고 미소 어느 진영에도 예속되지 않도록 하고자 비동맹중립주의를 제창함에 따라 탄생하였다.

---

## 특별기고

화대혁명으로 외교 기능이 거의 정지되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중국은 수 카르노(Sukarno)의 제창에 따라 반동회의 정신을 지지하는 아시아·아프리카 신생국들의 신흥역량운동회(GANEFO: 1963년 자카르타, 1966년 프놈펜)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스포츠외교’에도 공을 들였다.

중국의 ‘평화공존외교’는 미국이 “북(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내세워 베트남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1964년을 고비로 바뀌었다. 중국은 1965~1973년 연인원 32만 명의 정예병력을 파병하였으나, 17도선 이 북에만 배치하여 후방지원을 담당하면서 북베트남군의 남진을 뒷받침하였다. 다만 두 대국은 한국전쟁에서의 학습 효과가 있어 직접 대결은 없다는 목계 아래 반제와 반공을 앞세운 간접 대결을 통해 중간지대 쟁탈의 열전을 벌인 것이다.

이처럼 외교무대와 전장에서 중국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신흥독립국과 일체감을 보이면서 그 대변자·지원자의 면모를 과시함으로써 중간지대로 약진할 수 있었다. 그에 힘입어 1971년 9월 유엔 총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서 장제스(蔣介石) 정부의 지위를 대신한다는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신중국의 5대국 지위가 제도화된 것이다. 1971~1972년에만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나라가 33개국이나 되었다. 그 대다수가 중간지대 국가다.

### 3. 제3국을 향한 삼각외교: 연소반미에서 연미반소로

한국전쟁 이후 중미국교정상화까지 20년간 신중국의 미소에 대한 정책은 원폭실험에 성공한 1964년 연소반미(聯蘇反美)에서 반미반소(反美反蘇)로 조정되더니 1969년 이후 다시 연미반소로 바뀌었다. 이를 세이

셴(謝益顯)은 “대삼각” 구조라 하고, 키신저(Henry Kissinger)는 “삼각외교”라 불렀다. 두 초강대국 사이에서 중국이 균형자로서 담당할 역할을 부각한 것이다. 실제로 덩샤오핑(鄧小平)은 중국을 “대삼각의 1각”, “다극 중의 1극”이라 했다.

이 관점을 이해하려면, 앞서 본대로 마오쩌둥의 중간지대론이 처음부터 원리상 중미소(中美蘇) 삼각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마오쩌둥은 1949년 6월 소련 일변도 노선을 발표하여 즈다노프(Andrei Zhdanov)의 양대진영론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것은 곤차로프(Sergei N. Goncharov) 등이 말한 대로 “중화의 부흥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위해 잠시 소련의 지원을 받으려는 전술적 조정이었다.

중국의 연소정책은 1958년을 지나면서 분쟁으로 치달아 1964년 반소정책으로 바뀌었다. 1958년 흐루쇼프(Nikita Khrushchyov)가 미일군사동맹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영내에 레이더기지와 잠수함부대를 공동 건립하자고 제안하자, 마오쩌둥은 이를 기술 격차를 이용해 운영권을 장악함으로써 중국의 국가주권을 훼손하려는 시도라 여겨 격노하였다. 이를 협의하려면 흐루쇼프가 중국에 와야 한다고 주장하여, 베이징에 온 그와 만나 잠수함부대는 거절하고 레이더기지

한국전쟁 이후 중미  
국교정상화까지 20년간  
신중국의 미소에 대한  
정책은 원폭실험에  
성공한 1964년  
연소반미(聯蘇反美)에서  
반미반소(反美反蘇)로  
조정되더니 1969년  
이후 다시 연미반소로  
바뀌었다.

는 중국이 책임지고 건설해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공동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마오쩌둥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소련에 대해 주동외교를 펼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그 후 소련은 북만주에서 외몽골을 거쳐 인도에 이르는 중국 포위망을 형성하였고, 마침내 1964년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그해 10월 혁명기념일에 모스크바를 방문한 중국 대표단에게 말리놉스키(Rodion Malinovskii) 국방장관이 “우리가 중소 갈등의 한 축인 흐루쇼프를 축출했으니 그대들이 마오를 축출하여 중소 관계를 회복하자”고 제안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듬해 “반제를 위해서는 반수정주의가 필수다”라는 구호가 나온 까닭이다. 이로써 중국의 3각외교는 연소반미에서 반소반미로 바뀌었다.

중국이 반소반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소를 동시에 상대하면서 쟁탈하려 한 중간지대의 하나가 인도차이나반도다. 1961~1963년 케네디(John F. Kennedy)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자 마오쩌둥은 호찌민과 협의해 파병도 포함하는 대비책을 세워 “후발제인(後發制人)”의 기회를 엿보다가 1964년 미국이 톤킨만사건으로 전면전에 나서자 파병하여 지원하였다. 한편 그해에 집권한 브레즈네프(Leonid Brezhnev)가 이 전쟁을 지원하려고 나서자 마오쩌둥은 이에 반대하였다. 소련은 호찌민에게 친중정책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면서 중국보다 더 많은 무기와 군수품을 지원하였다. 중간지대 쟁탈을 놓고 미국은 물론 소련과도 대립하고 경쟁한 것이다.

중국이 연인원 32만 명을 파병하여 베트남의 승리(특히 미군의 축출)를 뒷받침함으로써 남방의 안전을 확보한 것이야말로 반소반미에서 다시 연미반소로 전환하는 발판이 되었다. 마오쩌둥과 닉슨(Richard Nixon)은 거의 동시에 한국전쟁 이래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가중되는 소련의 팽창

주의에 공동 대처하는 쪽으로 양국 관계를 조정해 나갔다.

미중 간의 화해와 국교정상화는 1971~1972년 급속히 진행되었다. 쟁점은 타이완 문제와 미일동맹 문제였다.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타이완은 그 영토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에 대해 “인지”한다(1972)는 단계를 거쳐 결국 “승인”하였다(1978). 미국은 이에 상응하여 단계적으로 타이완 주둔 미군을 철수하였다. 이에 맞춰 일본도 중국과 수교하였다. 중국은 미일안보조약의 폐기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그 조약으로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섰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와 반소연대를 우선하여 이를 묵인하였고, 그 대신 미일에게 요구해 중-미일 쌍방이 “아시아·태평양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결국 한국전쟁 이래 중국이 주동적으로 펼쳐온 삼각외교는 여기서 부분적으로 제동이 걸린 셈이지만, 중국은 세계 정치의 대삼각 중 일각, 곧 제3극을 이루어 미소 사이의 균형을 잡는 ‘액터(actor)’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과시할 수 있었다. 반면, 중소동맹조약이 종료된 것과 달리 그에 대응해 형성된 미일동맹은 존속시켰다. 바로 이것이 미소 냉전 종식 후에도 동북아 냉전만 남아서 가열 조짐을 보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잔류한 냉전의 책임은 미일 못지않게 중국에도 있는 것이다.

#### 4. ‘중국’의 딜레마와 한중 관계

이상에서 살펴본 20여 년간 중국의 자기인식과 대외정책의 결과를 최근까지의 추이와 연결해 보면 중국의 승리라 할 만하다. 그러나 중국에는 대외관계상 특유의 딜레마가 있으니 이를 직시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

요하다.

그것은 ‘중국(中國)’ 자체에 내장된 태생적인 모순에서 유래한 포위공포증이다. 중국은 그 의미상 ‘4이(夷)’에 둘러싸인 ‘중앙지국(中央之國)’으로서, 인접한 사방의 국가들을 자기방어의 울타리(藩屬)로 삼았다. 그런데 이 울타리는 중국이 국력의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조공과 호시(互市)를 허용해 구심력을 유지할 때에만 작동했을 뿐이다. 특히 19세기에는 서양 열강이 중국을 포위하고 ‘백년굴욕’을 강요한 전초기지로, 냉전기에는 미소의 군사기지로 바뀐 것을 보라. 키신저도 간파한 “포위당한 중국이라는 찢을 수 없는 두려움”의 소재이다. 중국의 대외전략에서 이미 혁명의 대의가 사라졌으니 지정학적 딜레마는 더욱 도드라진다.

한국은 이같은 중국의 안보 딜레마를 조성하는 이웃 나라들 중에서도 최전선에 있다. 1992년 중국은 한중수교 당시 한중 관계의 발전이 미국 패권주의, 부활 조짐을 보이는 일본 군국주의, 타이완 독립세력을 견제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한국을 미일 패권에 대응하는 완충지대나 지렛대로 여긴 셈이다. 미일 쪽에서 보아도 한국은 그러한 위치에 있다. 그런 만큼 한국은 자신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상당한 운신의 폭을 확보할 수 있다. 국력의 크기로 보아 이미 소국이 아닌 만큼 미중 사이에서 ‘중삼각’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현실이다.

그러려면 한국은, 남북한이 서로 적대할수록 이 역할이 작아질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면서 ‘중국’ 본래의 모순을 고려하는 전략적 사고로 대응해야 한다. 양국 관계-지역질서-세계질서가 상호 맞물린 구조를 고려하여 중국의 역사와 현실을 꿰뚫어 보려면 이념 편향에 의한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의 패권 추구가 공산당의 통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현 정부의 냉전적 인식이 그것이다. 이와 달리, 1920~1930년대의 국민당도 세

## 특별기고

중국성(中國性)의  
본질을 직시하고  
그것을 회복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와 역량을  
유동하는 국제조건  
속에서 파악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밀고  
당기는 ‘진짜 외교’가  
필요하다.

계/동방 피압박민족의 영도자로 자처하면서 ‘삼민주의 세계혁명론’을 정립하고 그 지도기관으로 코민테른(Comintern)을 벤치마킹한 ‘삼민주의 인터내셔널’을 건립하려 했다.

요컨대, 중국성(中國性)의 본질을 직시하고 그것을 회복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와 역량을 유동하는 국제조건 속에서 파악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밀고 당기는 ‘진짜 외교’가 필요하다. 현 정부는 상대만 미일로 바꾸어 조공시대 ‘일변도 외교’의 편안함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무시하고 혐오하면서 그 반대쪽으로 기우는 ‘일변도 외교’로 한중관계의 바람직한 미래를 개척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용태(柳鏞泰, Yu, Yong-tae)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명예교수

중국현대사 전공으로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회장,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를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 『중국역사 연구법』(역주), 『동아시아사를 보는 눈』, 『한중관계의 역사와 현실: 근대외교, 상호인식』(편저), 『직업대표제, 근대중국의 민주유산』,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공저) 등이 있다.

## 새로운 중미 관계 프레임 속 한중 관계 ‘한국식 모델’의 형성, 특징, 전망을 중심으로

스위안화(石源華) 푸단대학(復旦大學) 석좌교수

2016년 초, 필자는 중국 외교부 주관으로 발행되는 외교학술지 『세계지식』에 ‘한국식 모델에 대한 찬동’<sup>1</sup>이라는 글을 기고하여 당시 새로운 중미 관계 프레임 속에서 대미·대중 관계를 지혜롭고 원만하게 처리한 한국의 전략을 ‘한국식 모델’이라고 통칭한 바 있다.

이 모델은 중국의 주변국들이 중국, 미국과의 관계에서 균형 잡힌 전략을 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벽한 ‘한국식 모델’의 구축이 한중 관계의 우호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세계 평화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하였다.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이한 역사적인 해이다. 전쟁을 그치고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한 지 70주년이 된 해이자, 한중 관계가 국내외적으로 여러 시험대에 오른 중요한 해이기

1 石源華, 2016, 「爲“韓國模式”點贊」, 『世界知識』 2016-1.

도 하다.

100년 만의 대변혁기와 미국의 새로운 글로벌 전략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 지속, 중국·미국·타이완 간의 갈등 격화, 북미 간의 빈번한 대립 등 일련의 충격과 파장을 몰고 왔다. 세계는 그야말로 여러 위기가 공존하는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미국의 글로벌 전략의 초점이 아태 지역, 한반도, 타이완해협, 남중국해 등이 아닌 유럽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 전쟁이 지속되는 한, 또 다른 대규모 전쟁이 야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지만, 미국과 서방국들의 ‘부채질’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 협상과 중재적 입장을 고수하였고, 그 결과 두 집단의 대립과 ‘신냉전’ 구도의 형성을 막는 데 일조하였다. 사상 초유의 대격동시대에 접어들면서 중미 관계에 새로운 충돌 프레임이 형성되었다. 한중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서 국제정세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갈수록 증폭되었다. 중국의 주변국 외교전략의 큰 틀은 한중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1. 중미 간 ‘중간국가’의 전형인 한국

중국의 주변 또는 전 세계에서, 중국의 끊임없는 굴기(崛起)에 따라 중미 간 경제 격차가 축소되면서, 패권경쟁을 둘러싼 양국의 구조적 모순이 갈수록 장기화, 첨예화되고 있다. 트럼프(Donald Trump)와 바이든(Joe Biden) 두 대통령은 중미 갈등과 충돌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화시켰고, 이로 인해 양국 관계가 새로운 프레임 속에 보다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양상으로 치달고 있다. 현재 중국의 국력과 위상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 특별기고

현재 중국의 국력과 위상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이 여전히 구조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상 중단기적으로 미강중약(美強中弱)의 큰 틀에는 가시적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것은 사실이나, 미국이 여전히 구조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상 중단기적으로 미강중약(美強中弱)의 큰 틀에는 가시적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는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과 그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중간국가로 삼분되어 있다. 이 중간국가들 가운데는 미국과 동맹을 맺은 나라도 있고 중국과 친근한 나라도 있다. 선진국, 강대국도 있고, 수많은 개발도상국도 있다. 중국과 우호적인 국가도 있으며,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도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아태 또는 인도태평양 국가 및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의 국가들, 심지어 유럽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은 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미 양국에 대해서 다양한 정도의 균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모두 중국과 미국 사이의 “중간국가”이다.<sup>2</sup>

한국은 대미국·대중국 정책에 있어 균형전략을 실시하고 있는 전형적인 ‘중간국가’이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군사기지로서, 미국은 여전히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또한 아시아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몇 안 되는 국가로, 세계에서, 아태 지역에서 중요한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

2 石源華, 2017, 「中國周邊已經出現新的“三個世界”架構」, 『世界知識』2017-15.

으며,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국가이기도 하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고 정치적으로 협력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안보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발전과 생존은 중국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중국의 급부상 또한 양국 관계의 우호적인 발전과 연관이 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익을 얻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패권 유지라는 구조적 모순이 한중 관계 및 한국의 아태 지역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취한 균형전략, 이른바 ‘한국식 모델’을 탄생시켰다.

## 2. ‘한국식 모델’의 특징과 의미

한국과 중국은 냉전시대에 서로 다른 진영에 속한 적대국이었다. 70년 전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북중러의 ‘북삼각(北三角)’ 진영과 한미일의 ‘남삼각(南三角)’ 진영이라는 냉전적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다. 당시 한국과 중국은 완전한 적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스포츠 경기에서조차 양국 선수단이 만나면 ‘죽어도 교류하지 않거나’, ‘만나면 기권하겠다’고 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970년대 초 중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나서야 남북 관계도 개선되기 시작하였고, 중미 양국의 공동 추진하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기도 하였다. 이는 한중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다. 미소 냉전시대가 종식된 이후 소련체제가 붕괴되면서 북중러의 ‘북삼각’ 진영이 와해되고 한중 관계도 크게 개선되었다.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은  
각자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공동  
이익과 노력으로  
대한·대중·대미  
관계를 현명하게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국식  
모델’이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2년 8월 한중수교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은 ‘북방외교’를 추진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개선시켰고, 이에 따라 한중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새 시기에 접어들었다.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은 각자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공동 이익과 노력으로 대한·대중·대미 관계를 현명하게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국식 모델’이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크게 개선된 중미 관계는 한중 관계 발전에 전례 없는 역사적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이므로 대중국 정책을 결정하는 데 미국의 이익, 제약, 영향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이다. 두 나라 모두 제1열도선(第一列島線, first island chain)에 위치한 주요 국가이지만, 중국을 대하는 양국의 태도는 확연히 다르다. 일본이 미국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것과 달리, 한국 정부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중국과는 어느 정도의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정치적·경제적 이익에 있어 상호 간 이해관계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이는 한중 양국이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한국은 대미·대중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면

## 특별기고

서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심화시키는 한편,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한중 관계를 ‘동반자’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격상시켰고, 현재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수립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취한 균형전략은 ‘한국식 모델’의 출발점이 되었다. ‘한국식 모델’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한국은 세계적인 발전 추세와 국익의 관점에서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과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에서의 중국의 부상을 환영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을 자국 발전의 ‘위협’으로 간주하기보다 대중국 전략에 있어 미국과의 갈등과 충돌을 완화하고자 최선을 다한다. 무엇보다 중국 고성장에 기여하여 ‘편승’하여 협력관계를 심화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모색함으로써 자국 경제를 견인하고자 한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급부상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진입한 데에는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이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2. 한국은 군사안보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도, 한중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모색하는 등 두 강대국 사이에서 연대와 균형의 원칙을 성공적으로 지켜나가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6자회담 개최와 북미회담 추진 등을 지지하고 있다. 작년 8월, 펠로시(Nancy Pelosi) 미 하원의장이 중국의 강한 반발 속에 타이완 방문을 강행했을 당시, 한국은 아시아 순방 중이던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환영하여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준 동시에 ‘휴가’를 이유로 펠로시 의장을 ‘푸대접’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3. 한국과 중국은 각자가 선택한 발전노선, 정치제도, 가치관을 상호 존

중하고 있다. 한국은 미일과 서방 국가들이 책동하는 ‘가치관 동맹’에 참여하면서도, 오랫동안 중국의 사회주의제도, 정치체제, 가치관을 폄하하거나 공격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타이완해협, 홍콩,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티베트, 인권 등 중국의 내정 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미국, 일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입장과 정서를 고려하고 있다.

4. 한중 양국의 중대한 안보 이익과 직결된 한반도 군사안보, 특히 북핵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한국은 중국과 협력, 대화, 조율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6자회담과 북미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중국과 협력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5. 한국은 고구려 역사 문제, 어업 및 해양 분쟁 등 한중 간 이견과 분쟁에 대해 양국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여 원만하게 처리함으로써, 이러한 갈등과 분쟁이 한중 관계의 발전과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식 모델’은 어느 정도 중국의 양해와 지지, 협력을 얻어냈다. 한국은 한중 관계, 아태 지역 안보, 경제협력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모습을 보여 왔다.

한국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앞장서 가입함으로써, 중국이 제안한 아태경제협력체(아태운명공동체)의 출범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방 진영’의 국가원수 중 유일하게 중국을 방문하여 항일전쟁 승전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였고, 중국과 협력 중인 주요 경제국 가운데 가장 먼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양국의 경제협력을 촉진한 것은 물론 한중일 FTA 추진을 가속화하였다. 또한 한국은 일대일로(一

## 특별기고

한국은 30년 동안  
‘한국식 모델’을  
이행하면서 한중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등 성공적인 길을  
걸어오고 있다.

一帶一路)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여 중국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였으며, 타이완, 홍콩, 신장웨이우얼자치구 등 중국 내정에 개입하지 않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에 편승하지 않는 등 한미동맹 유지와 국익 수호라는 전제하에 한중 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2021년 한중 교역액은 3,624억 달러로 일본(3,714억 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며, 무역 흑자는 650억 달러로 호주(1,000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무역 흑자는 대중국 교역에서 창출된 바가 크며<sup>3</sup> 양자 간 교역액은 2022년에도 계속 증가하였다. 한국은 30년 동안 ‘한국식 모델’을 이행하면서 한중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등 성공적인 길을 걸어오고 있다.

### 3. 우여곡절 속 ‘한국식 모델’의 발전

‘한국식 모델’이 ‘중간국가’에 주는 시사점은, 균형전략이 대미·대중국 관계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균형이 우여곡절을 겪어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식 모델’은 중미 간의 구조적 갈등과 충돌, 한

<sup>3</sup> 한국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일본게이오대학 한반도연구센터,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2022. 5. 25, 『“인도-태평양과 한중일관계: 삼국삼색” 세미나 문집』.

---

## 특별기고

국의 국내정세 변화와 정치적 이유, 그리고 ‘한국식 모델’ 자체의 모순 등으로 인해 번번이 동요되거나 굴절된다. 중국의 주변 외교전략은 이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한국의 정치·군사·경제에 대한 미국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 한국의 국익이 대미·대중 관계에서의 균형 원칙과 괴리되거나 한국 정권 교체에 따른 충격과 변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도 있다. ‘한국식 모델’은 이러한 우여곡절을 반복하면서 일정한 필연성을 갖게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은 한때 미국의 압박과 북핵 위협을 이유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이른바 사드(THAAD) 배치를 승인하여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따라 한중 관계는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고 말았다. 결국 양국은 거듭된 교섭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갈등과 충돌을 이겨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3불1한’ 약속으로 중국의 이해를 얻어내고 양국 관계를 회복하였는데, ‘3불(不)’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1한(限)’은 현재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뜻이다. 당시 경험은 ‘중간국가’와 한국이 유사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022년에 취임한 한국의 대통령은 역사상 미국과 가장 가까운 대통령이 되었다. 이전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완전히 뒤엎으면서 미국의 지지를 얻어냈다. 여기에는 ‘3불1한’ 약속을 전면 파기한, 사드 기지의 정상화와 확대도 포함된다. 한중 양국이 우호적인 소통을 여러 차례 이어나갔음에도 ‘한국식 모델’은 또 한 번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사드 기지 정상화와 확대, 나토(NATO) 사무소 개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등은 다시 한 번 한중 관계 발전을 뒤흔드는 위험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양국의 공통된 정치적·경제적 이익이 양국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한중 관계가 후퇴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으나, 양자 간 노력 여하에 따라 ‘한국식 모델’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식 모델’이 한국의 국익 수호와 한중 협력 및 발전, 나아가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4. 향후 한중 관계 발전에서의 ‘한국식 모델’ 전략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중미 간 대립 양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양국의 격차는 갈수록 좁혀지고 있다. 반면에 중미와 ‘중간국가’들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이른바 ‘한국식 모델’은 비단 한중 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적·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중간국가’들과의 연대를 유지하고 ‘한국식 모델’ 발전을 지지하는 등 장기적 시각에 입각한 외교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1. 중국은 중미 관계의 개선과 대응을 전제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중미 공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현재 적응력을 기르는 중이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중미 관계를 처리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개념, 요구사항, 태도,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한 바 있다. 중미 양국은 역사, 세계, 국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류방법과 발전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는 중미 관계를 바람직한 발전 궤도로 되돌릴 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미국이, 가장 건설적인 협력 파트너로서 의지와 능력을 갖춘 중국을 ‘가상의 적’에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로 둔갑시킨다면, 이는 미국에게 가장 큰 불행이 될 것이다. 지난 2022년 중국 『환구시보』 연례회의에서 ‘중미의 평화 공존 패러다임

은 언제쯤 실현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미 전략경쟁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며, 10년 후 양국의 힘의 균형에 뚜렷한 변화와 이동이 생길 것이라고 추측하였다.<sup>4</sup> 분명한 점은, 중미 관계가 호전되면 자연스럽게 한중 관계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중국은 ‘중간국가’가 채택한 ‘한국식 모델’이 특정한 역사적 배경하에 우여곡절을 겪거나 대중국 기조가 바뀌는 등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과 한국 등 ‘중간국가’와의 관계는 양국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자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간국가’에 이해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중국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양보해서는 안 되며, 외교 문제와 외교관계를 분리하는 ‘투 트랙 전략’을 취해야 한다. 중국의 반발은 ‘중간국가’가 아닌 미국의 대중국 제재와 전략적 탄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간국가’인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 외교가 냉전시대로 회귀하지 않는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신냉전 국면에 휘말려 ‘냉전화된 외교전략’을 취하는 것은 한국 국익에 배치될뿐더러 한중 관계 발전과 지

4 「2023年環球時報年會系列報道之一—中美共處：新模式要磨合多久」, 『環球時報』2022. 12. 19.

역 평화 및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탈냉전 후 한국의 몇몇 대통령, 특히 그들을 배출한 민주당은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없애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며, ‘한국식 모델’의 추진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sup>5</sup> 물론 대중국 외교전략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한국 정치인도 있다. 그들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미국 편중’을 주장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그들이 기대한 이익을 얻어내지는 못할 것이다.<sup>6</sup> 중국과 미국은 분쟁 해결을 위해 타당한 방법을 모색하고, ‘중간국가’들이 대미·대중국 관계에서 균형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 ‘당사국’들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중국과 미국에 도움이 되는 지침일 것이다.

3. 더 많은 ‘중간국가’들이 다양한 외교 문제에 당면하여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은 한국이 중미 간 균형 정책을 펴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고 수용해 나가야 한다. 냉전시대의 이분법적 선택을 강제하는 철 지난 방식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중국은 자국과 영토·영해 분쟁이 있는 국가들이 중미

5 詹德斌, 「韓國外交不應退回到冷戰時代」, 『環球時報』 2023. 5. 10.

6 王付東, 「對華“秀肌肉”並不能讓韓國強大」, 『環球時報』 2023. 6. 15.

## 특별기고

사이에서 중립과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

4. ‘협력상생’, ‘운명공동체’라는 새로운 발상으로 미국의 패권주의와 냉전시대의 낡은 이념을 대체하도록 ‘중간국가’를 설득해야 한다. ‘협력상생’은 중국이 ‘중간국가’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어 기초이자 원칙이다. 아시아와 더 나아가 세계의 ‘운명공동체’를 적극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중국과 ‘중간국가’의 정치안보 및 경제협력 발전의 기본 목표이다. 중국은 이미 아태 지역은 물론 세계 정치안보 구도에서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과 ‘중간국가’들이 공동 노력을 통해 중국 주변과 세계에서 냉전의 비극이 재현되는 것은 피할 수 있다. 중국은 초강대국과 ‘지역 대리인’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세계적인 ‘협력상생’을 실현하고 양자 또는 다자 간 지역 발전을 위한 ‘운명공동체’를 수립함으로써 세계 패권주의에 맞서야 한다.



### 스위안화(石源華, Shi, Yuanhua)

푸단대학(復旦大學) 석좌교수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 초빙교수, 박사과정 지도교수, 푸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 한국북한연구센터 주임, 중국조선사연구회 부회장, 명예회장, 그리고 중국과 주변국 관계연구센터 창립 주임 등을 역임하였다. 근현대 중국외교사, 한국독립운동 및 한중관계사, 중국주변외교, 한반도 문제 및 동북아 국제관계를 주요 연구 분야로 『韓國獨立運動與中國關係編年史』(3卷, 2012), 『中華民國外交史新著』(3卷, 2014), 『新中國周邊外交史研究』(2019) 등의 저서가 있다.

포커스 I

#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

**미중 갈등과 동북아 신질서,  
그리고 한반도 문제**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21세기 새로운 중일 관계:  
'중화 부흥'과 '일본 부흥'의 상호 인식**

차재복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중러 관계와 한반도**

최덕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미중 갈등과 동북아 신질서, 그리고 한반도 문제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1. 강대국 정치와 미중 갈등

18세기 초를 전후로 등장한 근대 국제질서는 몇 가지 특징적인 보편성과 변화를 보이면서 지금까지 작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대국의 존재와 역할’, ‘세계 시장의 통합’, ‘자원의 초국가적 이동’, ‘국가들 간 상호 의존의 심화’ 등은 수백 년의 근대 국제질서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보편성의 원칙이다. 특히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핵심 강대국의 성격과 대외정책은 국제질서 전반을 규준(規準)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강대국 정치’ 성격을 설명하고 규명하는 일은 당연히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질서에서 소위 과학적 접근법이 국제정치학 연구에 활발하게 수용되면서, 몇 개의 강대국이 존재하는가, 강대국 간 관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일등 강대국과 이

등 강대국 사이에는 얼마만큼 힘의 격차가 있는가 등과 같은 질문이 이어졌다. 물론 이러한 질문이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다수의 ‘보통 국가’를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특정 시점의 국제정치 분석을 위해 강대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국제사회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적·정책적 효율성일 뿐, 그 이외 국가를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유럽의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균형 질서’, 20세기 미소를 중심으로 한 ‘양극체제’ 등은 당시 국제질서를 설명하는 가장 상징적인 분석 대상이다.

‘미중 갈등’은 현재의 국제정치 질서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다. 지금의 미중 갈등은 과거에 존재했던 다른 사례들과 비교하여 유사한 측면도 있을 것이고, 다른 측면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아직까지 미중 사이에 존재하는 소위 ‘종합국력’의 현실적인 격차를 고려할 때, 미중 갈등은 글로벌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전개되기보다는 동아시아 지역에 한정하여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이 미중 갈등의 전선(戰線) 한가운데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안보상황은 주변 국제정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왔기 때문에, 미중 갈등의 양상을 정확하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안보상황은 주변 국제정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왔기 때문에, 미중 갈등의 양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것이 한반도에 작동하는 연결성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학문적·정책적 숙명이다.

게 분석하고 그것이 한반도에 작동하는 연결성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학문적·정책적 숙명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졌고, 올해로 70년의 시간이 흘렀다. ‘휴전’이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협상 참여를 거부한 당시 우리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한반도 당사자로는 북한만이 협정에 서명하게 되었고, 당시 북한이 발간한 국문본에도 ‘정전’이라고 표기되었다. 대체로 전쟁 행위의 중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면 ‘정전’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은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외교·안보 자산으로 작용했고, 분단에서 비롯되는 안보비용을 보전해 주면서 경제 성장, 정치 발전, 그리고 사회 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냉전 종식 이후 세계화 30여 년 동안 한국은 그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린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다. 이런 성과의 이면에도 한미동맹이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게 사실이다. 한반도가 안고 있는 ‘국제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제성’이라는 정체성을 고려할 때, 미중 갈등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고조되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전략화해야 할 강대국 정치의 본질은 무엇일까?

현재의 강대국 정치를 상징하는 미중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냉전 종식 직후 강대국 간 경쟁이 소멸되어 가는 것처럼 여겨진 시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국력 및 반서구적인 정체성으로 인해 미국은 소위 ‘중국 위협론(China threat)’을 둘러싼 논쟁을 경험했다. 하지만 1997년 미중 외교관계에서 최초로 당시 중국 지도자였던 장쩌민(江澤民)의 미국 ‘국빈 방문’이 이뤄졌다. 이를 계기로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미국 조야의 지도자들에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중국을 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 클린턴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은 미국 내 중국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고, 구체적으로 2000년 미 의회가 중국을 상대로 통과시킨 ‘대외무역법(TRA, Trade Relations Act)’은 중국의 세계 무역기구(WTO) 가입을 포함하여 중국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대체로 이 시기를 전후로 세계화 시기 미중 관계의 구체적인 외교관계가 디자인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 2.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중 전략경쟁의 시작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통상적으로 미중 갈등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 대선을 통해 등장한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는 8년 동안 집권하면서,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첫 임기 4년과 두 번째 임기 4년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을 보였다. ‘아미티지 스쿨(Armitage School)’로 알려진 미일동맹 중심의 강경파 의견을 수용한 첫 4년에 비해, ‘졸릭 스쿨(Zoellick School)’로 대표되는 협상파의 의견을 수용한 두 번째 임기 4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제도적으로 정착된 미중 관계를 강조했다. 그런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한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이어서 등장한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와 연관된 다양한 국내외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용한 외교·안보 자원이 절대 부족하게 되었고, 그 결과 중국의 부상을 전략적으로 제어할 결정적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중 관계는 일종의 조정기를 거쳤고, 2010~2012년을 전후로 지금과 같은 본격적인 대결 구도가 시작되었다

는 평가가 가능하다. 양강의 대결 구도에는 전통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정성 유지가 미국의 핵심 이익에 부합한다는 대외전략이, 자신만의 ‘글로벌·지역전략’을 구축하기 시작한 중국의 이해관계와 충돌한 데에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미중 사이에서 발생한 강대국 정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인 변화를 겪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발견되었던 ‘사건 중심적인 경쟁(event-driven competition)’이 2010년 전후로 ‘제도 중심적인 경쟁(institution-driven competition)’으로 전환되었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글로벌 질서 정립의 주도권을 놓고 대립하는 ‘표준 경쟁(global standard-driven competition)’에 이르기까지, 미중 경쟁은 흥미로운 단계적 변화를 보여왔다.

특히, 갈등의 두 번째 단계였던 2010년을 전후로 한 중국의 일련의 정책들은 강대국 정치라는 맥락에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중국은 미국이 수립한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에서 벗어나 자국 중심의 국제제도를 직접 설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만 중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협력기구(SCO),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신개

중국을 미국이 수립한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벗어나 자국 중심의 국제제도를 직접 설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만 중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 포커스 I

발은행(NDB) 등과 같은 사례는 안보협력, 무역거래, 관세제도, 국제통화에 같은 영역에서 더이상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국제제도적 그늘 아래 머물 수 없다는 중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당시 미국은 부시 행정부가 감행한 두 대규모 전쟁으로 인해 외교·안보 자원을 중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한 상태였고, 결과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힘의 공백은 중국에게 중국 중심의 국제제도를 활용한 성장을 가능케 한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섰고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이라는 이름으로 미중 세력관계를 재정렬(rearrange)하고자 했지만,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가용 외교자원의 한계로 말미암아 미국의 전략은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코로나19(Covid-19)’를 겪으면서 미중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브렉시트(Brexit)’ 사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트럼프즘), 강대국들의 민족주의, 국제질서의 리더십 실종 등이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중국 경제 성장의 한계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세계의 결속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다시 강조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자유주의 질서는 향후 상당한 정도의 조정 국면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 3. 미중 갈등과 한반도

한반도 문제는 미중 갈등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 핵을 생존과 동일시하는 억지 논리를 제시하는 북한은 과거 한미동맹과 북중협력이 참여하게 대립한 한반도 안보구조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생산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의 기원을 1990년대 초반으로 잡는다면, ‘생존(survival)’ 논리를 내세운 북한의 핵 개발은 구 소련의 몰락과 한중수교가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하게 되는데, 소위 ‘남북한 사이의 내적 균형’과 ‘한미 및 북중(소) 사이의 외적 균형’이 한반도 분단 구조에서 팽팽하게 균형을 유지하다가 냉전의 종식으로 말미암아 일거에 무너졌기 때문이다. 전후 질서에서 독일, 베트남 등과 함께 국제정치적 요인의 결과로 분단되었던 한반도는 이 두 나라의 사례와는 달리 한반도 내부에서 작동한 ‘내적 균형’과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에서 작동한 ‘외적 균형’이 한반도 문제를 특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탈냉전으로 상징되는 ‘외적 균형’의 붕괴는 북한에게 생존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을 주었고, 결국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선택과는 달리 ‘핵무기 개발’이라는 비이성적인 옵션을 생존으로 믿게 된 것이다.

북한이 선택한 핵이라는 생존 옵션은 다른 옵션들과 달리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의 한반도 개입을 지속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만든다. 북한은, 한반도 문제가 남북 간 게임이라는 차원을 넘어 미중 간 게임으로 전환될 때, 자국의 생존에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셈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계산은 지난 시절 일관되게 내세워 온 ‘주체와 자주’의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이다. 즉, 한마디로 한국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작동해 온 한반도 안보구조의 ‘국제성’을 극대화한 국가 생존전략인 셈이다. 2012년 약관의 나이에 지도자가 된 김정은이 김정일이 유지한 ‘핵 개발 관련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하고 북한식 ‘총력전’을 통해 2017년 핵 무력 완성까지 내달린 배경에는, 미중 갈등의 심화라는 외부 환경적 요인이 가장 중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세력관계가 요동치는 상황은 북한의 생존 확

일부에서는 한미일 정상이 만난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후의 반작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미일로 상징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유주의 연대가 인류 보편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중러 간 밀착은 예상되었던 상황으로 간주된다.

보에는 유리한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밀착하고 있고, 김정은이 4년 만에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질서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미일 정상이 만난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 합의’ 이후의 반작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미일로 상징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유주의 연대가 인류 보편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중러 간 밀착은 예상되었던 상황으로 간주된다. 우려의 목소리보다는 한미일 연대가 가져올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국가 지혜가 절실한 때이다.

수 세기 동안 이어지고 있는 근대 국제질서의 대표적인 특징은 ‘강대국 정치’이고, 현시점에서의 강대국 정치는 미중 갈등이다. 강대국 정치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어떤 국가적 특성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강대국 정치의 양상은 서로 다를 것인데, 미국과 중국은 과거에 존재했던 강대국 관계와 비교하여 여러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중국이 과연 미국이 담당하고 있는 포괄적인 의미의 국제공공재 제공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까?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고 외교

미중 갈등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국가이익과 안보상황은 19세기 ‘독일 문제’처럼 ‘한반도 문제’로 전환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완전한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반도에 하나의 통일국가가 등장하는 문제를 놓고서 어느 수준에서 동의할 수 있을지의 문제이다.

이슈에 투입할 가용 자원이 많이 고갈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이버안보의 중요성, AI혁명, 디지털민주주의 개념의 등장으로 인해, 미국은 과거와 전혀 다른 유형 혹은 무형의 국제공공재를 발굴하고 있을 것이다. 한미일 자유주의 연대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9세기 말 독일은 경쟁관계에 있던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뒤늦게 근대적인 통일국가 시대를 열었다. 당시 유럽 전체가 경험했던 ‘독일 문제’는 ‘대독일주의’와 ‘소독일주의’ 논쟁을 야기하면서, 유럽인들은 하나의 통일된 독일이 유럽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의 질문에 천착했다. 독일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독 분단 과정에서도, 또 1990년대 초 냉전 종식과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미중 갈등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국가이익과 안보상황은 19세기 ‘독일 문제’처럼 ‘한반도 문제’로 전환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완전한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반도에 하나의 통일국가가 등장하는 문제를 놓고서 어느 수준에서 동의할 수 있을지의 문제이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주변국과 비교하여 외교정책에 투입할 정책자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

## 포커스 I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대한 미중 간 상이한 이해관계를 수렴시키는 통일의 역량을 확보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지난한 과제이다.

역사적 순간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포착하려는 강인한 의지와 능력을 준비한 민족과 국가에게 다가오는 법이다. 동북아에 드리운 신냉전의 그림자를 이겨내겠다는 의지와 능력이 필요한 때이다.



**박인휘(朴仁輝, Park, Ihn-hwi)**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안보, 동북아국제관계, 한미 및 남북 관계 등이다. 제67대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및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국가안보실 자문위원,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여러 부처의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한반도평화 만들기, 안민정책포럼, 중앙일보 리셋코리아 등과 같은 NGO 및 싱크탱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 21세기 새로운 중일 관계 '중화 부흥'과 '일본 부흥'의 상호 인식

차재복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21세기 시작부터 중일 관계가 녹록치 않았다. 2001~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의 계속된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참배,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尖閣列島, 중국 명 다오위다오(釣魚島)] 3개 섬의 국유화, 그리고 2023년 현재 후쿠시마(福島) 핵오염수 방류로 중국에선 격한 반일시위가 있었다. 일본에서도 중국과의 역사영토 갈등으로 '중국 위협'과 '반중 정서'가 고조되어 양국은 현재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21세기 초반기 중일 관계 갈등의 근원은 2010~2012년 당시 양국 간 경제규모(GDP)의 역전과 종합국력의 '대등화', 그리고 영토 문제의 '분쟁화'에 따라 역사적으로 강성했던 시기의 국가적·민족적 자존심이 상호 작용하는데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전후 중일 관계, 특히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 이래 201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와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가 국가지도자로 선출된 후 그들이 주창한 ‘일본 부흥=강한 일본’과 ‘중화 부흥=중국의 꿈’의 역사적·시대적 배경과 의의를 되짚어 본다. 다음으로는 ‘중일 관계와 한반도’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던 19세기 말 청일전쟁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살펴보고, 동시에 21세기 초 중국의 강대국화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대응을 짚어본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역내 타이완과 한반도를 둘러싼 관련 국가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관계 개선을 위한 조짐도 관찰되고 있어, 이참에 갈등을 넘어 협력을 지향점으로 한 한중일의 역할과 노력을 모색해 본다.

## 1. 역사상 중일 관계와 ‘2010~2012년’의 의의

역사상 중일 관계 구도는, 국력과 지위에 따라 크게, 고대시기의 중강일약(中強日弱), 근대시기의 일강중약(日強中弱), 그리고 21세기 초반기 중강일강(中強日強)으로 구분된다. 일본이 대규모로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문화와 과학기술을 배우는 수·당시기(581~907)부터 19세기 중반까지는 일본이 전통시대 중화질서하에 있었던 ‘중강일약’의 비대칭 구도였다. 이후 메이지유신(明治維新, 1868)으로 근대화에 앞선 일본은 대일본제국헌법(메이지헌법)으로 국가체제를 정비하여 ‘대동아공영권’을 주창하며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제2차 세계대전까지 동아시아 역내 국가를 침략하여 식민지화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군사력은 중국에게 ‘21개조’(1915)를 요구하면서 절정에 이른 반면, 중국은 이를 변곡점으로 국력이 점점 쇠퇴하여 ‘반식민지’로 전락했다. 청일전쟁 이래 중일국교정상화(1972)까지의 중일 관계는 일본이 군사와 경제 어느 면에서나 중국을

압도한 ‘일강중약’의 비대칭 구도였다. 나가이 카즈(永井和)는 20세기 동아시아 역사에서 일본을 “제국(帝國), 패전국, 경제대국”<sup>1</sup>으로 간명하게 정의한다.

전후 중일 관계에 대하여, 모리 카즈코(毛里和子)는 구조와 이슈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다섯 개의 시기로 나누어, 1949~1971년까지 냉전 속 대립기, 1972년 이후 1970년대의 전략적 우호기, 1980~1990년대 중반의 안정·발전기, 1990년대 후반부터 2004년까지의 구조변동기, 2005년 봄 반일시위 이후로 구분한다.<sup>2</sup>

필자 또한 모리의 방식대로 전후 중일 관계의 구조와 이슈(갈등 요인)에 의한 단계적 구분에 동의하지만, 2010~2012년 이후부터는 양국 간 ‘구조와 이슈’에 의한 단계 구분이 의미 없어 보인다.

첫째, 21세기 초의 중일 관계는 양국 간 (갈등) 요인보다는 외부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일 관계는 1972년 국교정상화부터 1992년 일왕의 방중까지 20년 동안은 우호·협력의 관계로 발전하였다. 이때까지는 중국이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와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한 시기였다. 경제적으로는 ‘일강중약’의 비대칭 구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은 역사영

1 永井和, 2007, 『日中戦争から世界戦争へ』, 思文閣出版, 3~36쪽.

2 모리 카즈코(毛里和子) 지음, 조진구 옮김, 2005, 『중일관계: 전후에서 신시대로』, 리북, 17쪽.

토 갈등과 경제협력의 상호작용을 관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홍콩의 중국 반환(1997)을 기점으로 서구 사회에서 ‘중국 부상(中國崛起) = 중국 위협’론이 회자되고, 미국의 오바마(Barack Obama) 정부가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2011)’로 중국 견제에 나서면서 중일 관계는 미국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2008년 5월 도쿄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와 후진타오(胡錦濤) 정상에 의해 ‘전략적 호혜’ 관계라는 미래 이정표를 설정하였지만, 2010~2012년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발생한 영토 분쟁과 국유화 시시비비를 계기로 양국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또한 미국이 센카쿠열도는 미일안보조약의 대상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중일 간 ‘전략적 호혜’ 관계 구축은 쉽지 않다. 아베 총리(1기 내각) 또한 2006년 시점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호혜’에 관하여 “중국과의 ‘우호’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우호를 위해서 국익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sup>3</sup>고 언급한 바 있다.

둘째, 중일 관계는 2010~2012년을 변곡점으로 이전의 비대칭형 관계에서 ‘중강일강(中強日強)’의 대칭형 구도로 바뀌면서, 그 성격도 전략적 ‘호혜’가 아닌 동아시아 주도권을 다투는 전략

3 安倍晋三, 2023, 『安倍晋三 回顧録』, 中央公論新社, 80~81쪽.

적 ‘경쟁’ 관계로 변했다. 2010년 중국의 GDP 규모<sup>4</sup>가 일본을 앞서 양국의 경제규모가 역전되면서 양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대등한’ 관계 구도를 형성했다.<sup>5</sup> 때마침 9월 7일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충돌사건(이하 ‘2010센카쿠사건’)은 일본의 대중국 인식 전환의 도화선이 되었다. 일본 총리관저와 외무성은 2010센카쿠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놀랐고, 보수 정치인들은 ‘중국 위협론’을 다시 도마 위에 올리면서 아베 내각과 일본 정치가 보수 우경화로 치닫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중국사 전문가 이이지마 와타루(飯島渉)에 의하면, 당시 2010센카쿠사건의 동영상이 일본 인터넷에 떠돌아 그 여파로 러시아의 메드베데프(Dmitri Medvedev) 대통령이 북방영토[구나시리(國後島)]를 방문하였으며, 일본은 주일러시아대사를 소환하는 등 동아시아가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러웠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당시에는 일중·일러 관계의 전체적 구도가 확실하지는 않았으나, 장래에는 분명히 큰 문제를 초래할 계기적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sup>6</sup>

그의 예견대로, 일본은 2012년 9월 11일 센카쿠열도의 3개 섬을 국유화했다. 그리고 9월 26일

4 2010년 통계(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의하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5조 8,790억 달러로 일본의 5조 4,740억 달러를 추월했다(<http://www.scio.gov.cn/zhzc/2/32764/Document/1442342/1442342.htm>, 검색일 2015.1.10). 2015년 중국의 GDP는 10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미국과 함께 10조 달러 그룹에 속하고 일본의 GDP는 중국의 절반 수준이다.

5 일본 학계도 “오늘날의 일중 관계는 경쟁적 측면이 전면에 노정되기 쉬운 구조로, 그러한 구조 자체가 유사 이래 일본과 중국의 대등한 관계 때문이고, 이는 처음 겪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國分良成·添谷芳秀·高原明生·川島眞, 2013, 『日中關係』, 有斐閣アルマ, 1쪽.

6 飯島渉, 2011, 「中國史が亡びるとき」, 『思想』2011-8, 岩波書店, 99쪽.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신조가 총재로 당선 되고, 같은 해 11월 중국에선 시진핑이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되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자국이 찬란했던 전통시대의 ‘중화 부흥’과 탈아입구(脫亞入歐)로 근대화해 앞선 ‘일본 부흥’의 전성시대를 떠올리면서 동아시아 패권을 모색하는 한편, 각각 미국, 러시아와 군사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2. 아베의 ‘일본 부흥’과 시진핑의 ‘중화 부흥’

### (1) ‘일본 부흥’에 대한 중국의 인식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총리는 역사상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2000년의 우호, 50년의 대립”으로 정리한 바 있다. 50년이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국병합, 만주사변, 중일전쟁,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를 말한다.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과거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에 패한 ‘치욕’의 역사를 오늘날 ‘중국의 부상(中國崛起)’을 위한 역사적 교훈으로 삼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일본 연구소장 양보장(楊伯江)은 “아편전쟁이 외부로부터 동북아의 전통적 지역질서에 충격을 가했다면, 동북아 내부로부터 화이(華夷)질서를 무너뜨린 상징적인 사건은 1874년 일본의 타이완 침략

중국과 일본은 각각 자국이 찬란했던 전통시대의 ‘중화 부흥’과 탈아입구(脫亞入歐)로 근대화해 앞선 ‘일본 부흥’의 전성시대를 떠올리면서 동아시아 패권을 모색하는 한편, 각각 미국, 러시아와 군사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었고 1894년 청일전쟁은 기본적으로 화이질서에 대한 최후의 일격이었다”고 정의한다.<sup>7</sup>

중국은 청일전쟁을 갑오년(甲午年)에 발생했다 하여 ‘갑오전쟁’이라고 부른다. 당시 ‘아시아 최강’으로 자부하던 청조의 북양함대는 일본군에 연전연패했고, 1895년 이홍장(李鴻章)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시모노세키(下關)강화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청이 조선의 독립을 확인하고 군비 2억 냥을 배상하며, 라오둥반도(遼東半島)와 타이완, 평후(澎湖)섬을 일본에 할양하는 것이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014년 청일전쟁 120주년을 맞아 관련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류장용(劉江永, 중국 칭화대학 국제문제연구원)은 지난 120년을 60년 순환의 갑자(甲子) 주기로 이등분하여 각 구간에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

그에 의하면, 첫 번째 주기인 청일전쟁(1894)부터 한국전쟁 휴전(1953)까지는 ‘식민, 전쟁, 혁명’의 60년으로, 한반도는 줄곧 미일중러 4강의 각축장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기인 휴전 이듬해 1954년부터 2014년까지는 ‘냉전, 평화, 경쟁’의 60년으로, 한반도와 4강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세 번째 주기의 시작점(2013)에 재집권한 아베 정부의 외교·안

7 양보장, 2015, 『동북아 지역은 역사와의 공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차재복 외, 『한중일 3국 관계: 새로운 협력을 향하여』, 동북아역사재단, 134쪽.



이토 히로부미

Herbert P. Bix, *Hirohito and the making of modern Japan*, 2000, HarperCollins Publishers, pp.244~245

보정책이 전면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고, 120년 전 청일전쟁을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의 대중국 침략정책과 유사하다면서 여섯 가지 공통점을 들었다.

첫째, 아베 내각이 2013년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대강’을 각 의에서 결정하여 ‘5개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4~2018)’을 통과시킨 것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겨냥한 것이다. 이 정책은 이토 내각의 육군 참모본부가 청을 침략하기 위해 1887년에 ‘대청전쟁계획’을 만들고, 5개년 군비확충계획을 도모하여 1892년 이전에 전쟁 준비를 마치고 청일전쟁을 도발했던 것과 유사하다.

둘째, 아베 내각은 일본 최초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출범시키고 이를 사령탑으로 일본 정부 전체가 국가안보전략 수립에 참여하고 있다. 이 구상은 이토가 당시 메이지천황을 중심으로 한 전쟁사령부인 대본영을 설립하고 집권 기간에 청일전쟁을 도발했던 것과 유사하다.

이토는 청일전쟁 전인 1889년 반포된 대일본제국헌법(메이지헌법)의 제정자이고, 아베는 이토를 답습하여 현행 평화헌법의 개헌(9조)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셋째, 아베 내각은 중국과 북한을 주요 적으로 간주하여 NSC 산하에 양국을 별도로 다루는 국가안보국을 설치하였다. 이 체제는 이토 내각이 청일전쟁 전인 1886년에 중국과 조선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군사지휘기구인 참모본부를 창설했던 것과 유사하다.

넷째, 2013년 11월 일본 국회는 자위대법을 통과시키면서 재외 일본 국민을 철수시킬 때 자위대를 파견하여 육상 수송 임무를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중무장을 허용했다. 이 정책은 이토 내각이 1894년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 시에 ‘재외 일본 국민의 안전 보호’ 명분을 앞세웠던 것과 유사하다.

다섯째, 아베는 2013년 7월 해상보안청과 자위대원의 사기 진작과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특별히 이시가키섬(石垣島)과 미야코섬(宮古島)을 방문했다. 이는 이토가 1887년 군함을 타고 오키나와(沖繩)를 순시하면서 중국에 대한 전쟁 준비를 구상했던 것과 유사하다.

여섯째, 이토는 청일전쟁 전인 1889년 반포된 대일본제국헌법(메이지헌법)의 제정자이고, 아베는 이토를 답습하여 현행 평화헌법의 개헌(9조)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sup>8</sup>

실제로, 아베 정부는 2012년 출범 이래 ‘침략’

8 劉江永, 2015, 「“安倍政治學”與中日韓關係」, 『東北亞論壇』 2015-3, 12쪽.

전쟁을 부정하고, 일본군‘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와 식민지 지배와 침략 행위로 중국과 한국 등 주변국에게 사죄한 무라야마(村山)담화를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아베의 정치적 염원인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격상시키고 집단적 자위권<sup>9</sup>을 확보하겠다고 개헌을 시도해 왔다. 류장용에 의하면, “전후 70년 동안 일본은 미국과 동맹을 맺었으나 대외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미일동맹이 전후 일본 평화헌법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의 현행 헌법(9조)이 전복된다면, 일본은 다시 한 번 군사동맹을 이용하여 중국과 한반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한다.<sup>10</sup>

9 참의원 선거 후 2013년 8월, ‘집단적 자위권의 헌법 해석 변경’에 관해 아베 총리의 국제법상 가능성과 전 내각법제장관 아마모토 츠네유키(山本庸幸)의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安倍晋三, 2023, 『安倍晋三 回顧録』, 中央公論新社, 115~117쪽 참조.

10 류장용, 2015, 「아베 폴리틱스와 한중일 관계」, 차재복 외, 『한중일 3국 관계: 새로운 협력을 향하여』, 동북아역사재단, 87쪽.

11 「청일전쟁 치욕 잊지 말자…中 124년 전 침몰한 군함 인양한다」, 『중앙일보』 2019.9.8(<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73168>, 검색일 2019.12.1).

한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18년 6월, 집권 후 처음으로 산둥성(山東省) 웨이하이시(威海市) 앞바다 류궁다오(劉公島)의 과거 북양함대 주둔지와 갑오전쟁박물관을 방문한 바 있다. 그는 “이곳에 한번 와서 느끼고 배우고 싶었다. 항상 경중을 울리고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13억 중국인이 분발해 강성해질 수 있다”며 “역사의 교훈을 새겨 중국을 해양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sup>11</sup>

‘중국굴기’의 국제정치학적 이론을 제시한 연쉐통(閻學通)은 시진핑 정부가 공식 출범한 2013년



인민해방군 해군 의장대를 사열하는 시진핑 주석(중국 칭다오, 2019. 4. 23, 연합뉴스)

에, 10년 이후(2023) 주요 대국들의 국제적 지위를 전망한 바 있다. 그의 전망에 의하면, 미국은 여전히 패권국가로서 중국과 양자 구도를 형성할 것이고, 중국은 미국을 추격해 세계의 중심을 동아시아로 이동시킬 것이고, 일본은 2류 국가로 전락해 지역대국의 자리를 차지할 뿐이고, 러시아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일본 경제가 향후 10년 침체를 거듭할 경우 2023년 일본의 GDP는 미국이나 중국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며, 경제적인 면에서 일본은 더 이상 미국이나 중국과 동급이 아니다. 2023년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경제력과 군사력의 변화뿐 아니라 일본의 외교적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미일동맹은 강화되겠지만, 미국의 다른 동아시아 우방과 일본의 관계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엔쉐통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나토(NATO)와 같은 다자간 군사기구를 세우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미국의 다른 우방과 일본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나토(NATO)와 같은 다자간 군사기구를 세우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미국의 다른 우방과 일본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sup>12</sup>

## (2) ‘중화 부흥’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인식

일본은 2010~2012년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경험하고, 이후 시진핑 정부의 ‘해양강국’ 전략과 그에 따른 중국의 공세적 외교를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아베 총리와 후계 지도자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개헌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이라크전쟁(1991)을 계기로 개헌 논의를 시작하여 ‘보통국가화’를 시도한 바 있다. 보통국가화란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일본에 걸맞는 군사적 역할을 다하여 세계 평화에 공헌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꺼낸 ‘개헌과 보통국가화’는 1990년대 논리와는 결이 다르다.

1990년대 논리는 다소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다면, 2013년의 개헌 논리는 중국(북한 요인 포함)의 실제적 위협에서 나온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일본이 2010센카쿠사건 시작부터 해결 과정에서 체험한 중국의 공세적 외교(중국 선원 당장 석방과 희토류 자원의 무기화 등)에

12 엔쉐통 지음, 고성희 옮김, 2014, 『2023년 세계사 불변의 법칙』, 글항아리, 154~156쪽.

서 비롯된 것이다. 아베 총리의 사임과 사망 이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 뒤를 이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현 총리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염원(개헌 9조)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의 전 오바마 정부와 상원은 2010센카쿠 사건과 2012년 센카쿠열도 국유화에 따른 중일 간 갈등을 계기로 ‘201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센카쿠열도가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이란 추가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그리고 미국은 센카쿠열도와 남중국해에서 ‘중국 위협’을 거론한 결의안도 통과시키면서 아태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sup>13</sup> 동아시아 역내 질서는 미일동맹의 중국 견제가 형성되어 대결 구도가 확대되고 있다. <sup>14</sup> 한편, 시진핑 주석은 미일동맹의 중국 견제를 회피하고자 2013년 ‘주변외교공작좌담회’를 주재하고, 2014년에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출범시키면서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일본과 서구 사회에서는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 초기에는 긍정적 여론도 있었으나, 근래에는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다.

미국은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일대일로에 대하여 ‘중화주의 회귀’라고 꼬집으면서 비판적 시

13 「美參議院稱中國在釣魚島及南海威嚇動武」, 『中國新聞網』 2013. 7. 29.

14 시진핑 주석은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 국유화와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 조치에 대하여 “전쟁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전쟁을 하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했다(『인민일보』 2013. 3. 11). 그리고 2013년 건군절(建軍節, 8월 1일)에는 베이징 군구를 시찰하면서 “실전능력 함양과 승전을 위한 강군목표”를 제시했다(『인민일보』 2013. 7. 30). 그 후 그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등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여 상하이 앞바다에서 공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미일동맹에 대항하여 중러 협력 구도를 만들어왔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이 주변국을 마치 과거 중국 역대 황실의 조공국 다루듯 하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의 대외정책을 조공외교, 중화주의 회귀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각을 견지하고 있다. 매티스(James Mattis) 전 미국 국방장관은 2017년 2월 도쿄에서 가진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움직임에 대해) 지금의 중국은 명 왕조의 책봉체제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주변을 전부 자신의 세력권으로 만들 계획일지도 모른다”고 했다.<sup>15</sup> 그는 같은 해 3월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산하 국방위원회에서도 중국이 주변국을 마치 과거 중국 역대 황실의 조공국(tribute-nation) 다루듯 하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의 대외정책을 조공외교, 중화주의 회귀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일본의 중국 연구자 모리에 의하면, 2010년 이후의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동·남중국해에서 새로운 해양대국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자원·무역·식량 등을 위해 북극을 포함한 전 세계를 향해 대외 확장의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고, 미중 관계에서 과도한 마찰을 피하면서 신냉전 체제의 출현을 억제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타이완, 홍콩, 신장웨이우얼 문제는 커다란 난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sup>16</sup>

기시다 내각은 중국의 과도한 팽창과 ‘타이완 유사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2022년 12월 적 미사일기지 등에 대한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담아 안보

15 「美國防長官, 對中國「もう寛容ではない」」2017. 2. 8, 『日本經濟新聞』(<http://www.nikkei.com/article/DGXKZO12659850Y7A200C1EA1000/>, 검색일 2017. 3. 24).

16 모리 카즈코 지음, 이 용빈 옮김, 2021,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한울아카데미, 293쪽.



일본 자위대 대원들을 사열하는 아베 총리(일본 아사카, 2018. 10. 14, 연합뉴스)

17 양관수, 2023, 「일본의 안전보장전략의 대전환과 동아시아 평화체제의 변화」, 『통일시대』(<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1624>, 검색일 2023.5.30).

관련 3대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했다. 일본 정부는 3대 문서 결정의 배경으로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 강행하는 북한, 국제질서의 근간을 붕괴하는 러시아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점을 들면서도 방점은 중국에 두고 있다.<sup>17</sup>

일본은 또한 5년 뒤 방위비를 GDP의 2% 이상으로 늘리고, 중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미국산 토마호크(Tomahawk)순항미사일을 구매하겠다는



『타임』 표지에 실린 기시다 총리(2023. 5. 9)

계획을 밝히고, 미국과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해병대 부대를 개편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개편한 부대는 혹시 모를 타이완 유사사태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sup>18</sup> 이에 대해 미국의 언론 『타임(TIME)』 인터넷판(2023. 5. 9)은 “기시다 총리는 수십 년에 걸친 평화주의를 포기하고 일본을 진정한 군사대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연쇄통은 10년 전 “일본의 미일동맹 강화 속,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18 「중국의 대만 침공, 한국이 '결정적 변수」, 2023. 2. 21,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30221137200009?input=1195m>, 검색일 2023. 2. 22).

---

## 포커스 I

중국을 선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경우 일본과의 과거사 갈등을 이유로 한중 협력은 강화될 것이고 한일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2023년 현재 한중 관계와 한일 관계는 그의 전망과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게다가 동아시아의 ‘화약고’라 불리는 타이완,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협력과 북중러 협력의 결속력이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있다.

한편, 금년 5월 20일 히로시마 G7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는 새로운 대중국 접근법으로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닌 ‘디리스크잉(derisking)’이 부각되고, 서구 사회는 중국과 건설적·안정적 관계를 구축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대중국 접근에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6월 4일, 설리번(Jake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디리스크잉’을 추구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후 중일 관계의 특수한 대화방식인 ‘반민반관(半民半官)의 1.5트랙’ 외교채널 움직임이 포착된다. 일중경제협회,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2024년 1월 23~26일 일정으로 베이징을 찾는 것으로 중국 측과 합의했고,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의 면담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sup>19</sup>

### 3. 맺으며

앞에서 살폈듯이, 메이지유신으로 동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근대화해 앞선 일본은 130년 전 한반도를 무대로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 청일전쟁은 근대시기 중일 관계에서 힘의 구도를 ‘일강중약’으로 역전시

명실상부한  
3국 정상회의가  
되려면 각국의  
'최고지도자'가 함께  
갈등요인을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대화채널이 되도록  
중지(衆智)를 모아야  
한다.

19 「日本經濟界代表團  
摸索2024年1月訪華」,  
2023. 9. 4, 『日本經濟新聞  
(中文版)』(<https://cn.nikkei.com/politics/economy/investtrade/53414-2023-09-04-10-07-59.html>, 검색일 2023. 9. 15); 「日재계, 4년 만에  
방중 시진핑주석 면담 조율」  
2023. 9. 3,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world/10821075>, 검색일 2023. 9. 15).

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내년은 한반도에서 청일 전쟁이 발발한 지 130주년 되는 해다. 21세기 초반기, 중일 양국의 강성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주장한 '중화 부흥'과 '일본 부흥'이 국내를 넘어 대외적으로 작용하면, 130년 전의 청일전쟁으로 돌아가 동아시아 역내 무력 충돌을 배제할 수 없다. 다행히 아베(기시다)-시진핑 시기의 중일 관계는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바라건대, 중국과 일본은 내년 1월 베이징에서 반민반관의 대화와 교류를 계기로, 동아시아 역내 갈등을 협력으로 반전시키는 관계 개선을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

안타깝게도 2010~2012년 중일 간 영토 갈등으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수차례 불발되면서 동아시아 협력담론은 크게 퇴색되었다. 양국 간 갈등으로 3국 정상회의 채널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근래 다행스러운 것은, 향후 한국에서 개최될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중국의 리창(李強)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의사를 보였다는 각국의 언론보도다.

명실상부한 3국 정상회의가 되려면 각국의 '최고지도자'가 함께 갈등요인을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대화채널이 되도록 중지(衆智)를 모아야 한다. 중국은 마오쩌둥(毛澤東) 시기부터 저

## 포커스 I

우언라이 총리가 주로 외교를 담당해 온 관례가 있다. 그러나 냉전기였던 당시와 현재 중국의 대외관계는 판이하게 다르고, 게다가 시진핑 주석은 ‘주변 외교’를 각별히 중시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정치의 특수성에 비추어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회의와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는 회의의 권위와 영향력은 크게 다르다.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중국에서도 최고지도자가 참석하는 3국 정상회의로 제도화하여, 역내 갈등요인을 관리하고 협력방안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도 긴요하다.



### 차재복(車在福, Cha, Jae-bok)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연구소에서 동북아국제관계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와 현대중국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근래, 현대 중국의 세계전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한중, 중일 관계와 한중일 협력 연구를 모색하고 있다.

# 중러 관계와 한반도

최덕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1. 머리말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동맹조약을 두 차례 체결하였다. 제국주의시대의 러청동맹조약과 냉전시대의 중소우호동맹조약이 그것이다. 전자는 청일전쟁 직후 1896년 모스크바에서 체결되었고 후자는 1950년 초 중국혁명을 승리로 이끈 마오쩌둥(毛澤東)의 소련 방문과정에서 체결되었다. 중러 간의 양대 동맹조약은 시기적인 차이점은 있으나 일본 혹은 일본과 그 동맹국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한 상호 지원을 골간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중소우호동맹조약을 소련과 중국이 체결한 시기는 6·25전쟁 발발 약 4개월 전인 1950년 2월 14일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과 중국공산혁명 성공을 배경으로, 러청군사동맹조약을 체결한 지 54년이 지난 1950년 초 소련과 중국은 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패전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의 참전  
경험은 중국과 소련이  
일본을 필두로 한 해양  
세력의 침략을 저지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  
따라서 중국 및  
소련과 접경한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의 이해가 교차  
함으로써 한반도의  
위기가 세계적 위기로  
확산되는 지정학의  
요충지가 되었다.

시 한번 동맹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중소 간에 체결된 1896년의 제1차 조약과 1950년의 제2차 조약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조약의 작동 조건은 공통점이었다. 1950년의 제1조에는 “체약국 중 어느 한쪽이 일본 또는 일본 동맹국의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있는 경우, 체약국 다른 한쪽은 전력을 다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일본과 그 동맹국이 중국 및 소련을 침략할 경우, 중소 양국이 상호 군사 지원을 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1896년의 러청동맹조약 제1조와 사실상 동일했다. 다만 국호만 러시아에서 소련으로, 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패전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의 참전 경험은 중국과 소련이 일본을 필두로 한 해양세력의 침략을 저지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이에 중소동맹의 성립은 제국주의시대부터 양국 지도자들에게 전승되어온 역사적 교훈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중국 및 소련과 접경한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의 이해가 교차함으로써 한반도의 위기가 세계적 위기로 확산되는 지정학의 요충지가 되었다.

반면 일본을 포함한 태평양의 해양 국가들은

## 포커스 I

러시아의 해양 진출을 우려하고 경계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횡단철도와 만주철도를 기반으로 한반도 또는 랴오둥반도 남부의 부동항(不凍港)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상황은 일본과 미국의 입장에서 반드시 저지해야 할 사안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와 한반도의 마산·진해, 그리고 랴오둥반도의 뤼순(旅順)·다롄(大連)에 근거를 둔 러시아 해군이 태평양의 해양강국으로 부상한다면 일본열도와 하와이뿐만 아니라 미국 서부의 안전에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19세기 말부터 랴오둥반도와 한반도의 부동항에 러시아의 해군기지 건설을 저지시키는 과업이야말로 일본과 미국의 국가 안위와 직결된 사활적 이해가 되었다. 따라서 영일동맹에 이어 미일안보동맹으로 이어지는 해양동맹 역시 제국주의시대부터 해양세력 지도자들에게 각인되어온 공포의식(恐露意識, Russophobia)의 실체였다.

2023년 3월 21일 모스크바에서 푸틴(Vladimir Putin)과 시진핑(習近平)은 ‘중러경제협력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중러 양국은 성명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구실 및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했다. 이는 중러 권위주의 정부와 서구 자유주의 정부 사이에 선을 분명하게 그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7월 러시아 해군 태평양함대 소속 호위함 등이 참여한 중러 연합해상훈련 ‘북부연합-2023’을 실시한 것은 권위주의 진영에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함이었다. 이는 7월 말 쇼이구(Sergey Shoigu)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의 면담에서 연합해상훈련을 공식 제의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중러 관계의 긴밀화와 미일의 대응전략이 어떻게 연동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의 운명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지를

역사적 맥락에서 살피고자 한다.

## 2. 제1차 중러동맹: 러청동맹조약(1896)과 미일의 대응

1896년 모스크바를 방문한 이홍장이 러시아 측 전권대표들과 체결한 15년 기한의 군사동맹조약 제1조에 “일본이 중국 혹은 한국 및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 대해 공격할 경우, 양국은 육해군 병력으로 상호 지원한다”고 동맹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 조약은 일본의 침략 시 한국의 방위를 위해 상호 지원한다는 한국 문제 개입 조약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체결했던 군사동맹조약의 효력범위에 한반도가 포함되었던 효시는 19세기 말 제국주의시대에 체결된 러청방위동맹조약이다. 이 동맹조약이 체결된 직접적인 계기는 청의 패배로 끝난 청일전쟁(1894-1895)이었다. 1896년 6월 3일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Nikolai II Romanov)의 대관식 축하사절로 모스크바를 방문한 청조의 이홍장(李鴻章)이 러시아 측 전권대표들과 체결한 15년 기한의 군사동맹조약 제1조에 “일본이 중국 혹은 한국 및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대해 공격할 경우, 양국은 육해군 병력으로 상호 지원한다”고 동맹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전권대표가 참석하지도 서명하지도 않았지만, 이 조약은 일본의 침략 시 한국의 방위를 위해 상호 지원한다는 한국 문제 개입 조약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

러청동맹조약 제4조에서 청은 헤이룽장성(黑龍江省)과 지린성(吉林省)을 통과하여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동청(東淸)철도 부설에 동의하였다.

이는 러시아 육군이 분쟁지역으로 용이하게 접근하고 식량 보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아울러 조약 제3조의 “청국 항구는 유사시 러시아 해군에 개방한다”는 조문을 명분으로 차르(tsar) 정부는 청으로부터 뤼순·다렌을 조차(1898)하여 동청철도와 연결하였다. 러청 간에 체결된 “랴오둥반도 조차(租借)협정”(1898. 3. 27)에 따라 러시아는 랴오둥반도에 군항과 상업항을 건설할 수 있는 권리를 25년간 부여받았다. 따라서 러시아는 청일 개전 시기부터 논의했던 시베리아철도의 해양 출구 및 태평양함대를 위한 부동항을 한반도가 아닌 랴오둥반도에서 획득하게 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와 청은 만주에 동청철도를 부설하고 랴오둥반도의 부동항인 뤼순·다렌항 개발에 합의함으로써 일본의 침략에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러시아의 뤼순·다렌 조차는 차르의 결정이었으나 재무상과 해군상은 이에 반대했다. 재무상은 러시아의 뤼순·다렌 조차로 인한 일본과의 전쟁 가능성을 우려했을 뿐만 아니라 만주 문제에 대한 해군의 간섭을 경계했다. 반면 해군성은 뤼순이 블라디보스토크와 멀리 떨어져 있고 한반도의 마산포(馬山浦)보다 전략적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비록 재무상은 하얼빈(哈爾濱)에서 뤼순·다렌을 연결하는 남만주철도 부설에 동의했지만, 해군성은 마산포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못했다. 따라서 주한러시아공사 파블로프(Alexandre I. Pavlov)와 대한제국 정부가 체결한 마산포 조차협정은 러시아 해군의 궁극의 목적지를 노정하고 있었다.

미국의 태평양 패권전략의 관점에서 볼 경우, 만주를 점령한 러시아가 한반도 남단의 마산포 해안에 조차지를 확보한 정황은 러시아의 태평양 출구 봉쇄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는 전쟁이었다. 자유정

(free government)이 전제정 혹은 독재정의 군대와 맞서 싸울 육해군을 조직하여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정부는 살아남을 수 없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의 지론에 따르면, “오늘날의 유럽, 미국 그리고 호주의 문명은 문명의 적들에 대한 문명인들의 승전 결과였다. 반면 초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침략자와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양 대륙에서 기독교도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루스벨트에게 전쟁이란 그 자체가 부도덕한 것은 아니었다. 기독교적 섭리사관에서 전쟁은 악을 응징하고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태평양  
패권전략의 관점에서  
볼 경우, 만주를 점령한  
러시아가 한반도  
남단의 마산포 해안에  
조차지를 확보한  
정황은 러시아의  
태평양 출구 봉쇄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는  
전쟁이었다.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체결(1902)하여 대러 견제에 나선 것은 러시아 봉쇄전략의 실천적 조치의 일환이었다. 루스벨트가 대러 봉쇄전략 수행을 위해 영국과 동맹을 맺은 일본에 가장 필요한 조치를 준비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청일전쟁 직후 영국도 일본을 돕지 못했던 삼국간섭(1895)의 재발 방지가 그것이었다. 루스벨트는 개전 즉시 독일과 프랑스에게 가장 정중한 어조로 러프독이 1895년의 대일 삼국간섭을 재현하기 위해 결합할 경우, “미국은 즉각 일본 편에 서서 시간에 구애됨 없이 일본을 도울 것”임을 통보했

던 것이다.

### 3. 제2차 중러동맹: 중소동맹조약(1950) 체결 경위

스탈린(Joseph Stalin)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승전 이후 『프라브다(pravda)』(1945년 9월 3일)에 실린 국민담화문에서 “태평양전쟁에서 소련의 승리가 40년 전 러일전쟁에서 패배한 아픔을 치유하는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했다. 스탈린의 담화문에 따르면, “소련 인민들은 일본이 패퇴하고 역사의 오점이 지워질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하고 지난 40년간 이날이 오기를 고대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러일전쟁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측은 “러시아 인민이 아니라 오히려 무능한 차르체제였으며, 오직 소비에트(Soviet)체제의 덕분으로 바로 그 인민들은 1945년 일본 파시스트들을 절멸(絶滅)시킴으로써 이 같은 오점을 씻어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스탈린은 전후에 러일전쟁 직전 제정러시아의 태평양정책을 부활시키려는 의지가 있었다. 그가 구상했던 동아시아의 전후 질서는 소련 주재 미국대사 해리먼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기밀전문(1944년 12월 15일)에 잘 나타나 있다.

스탈린은 전후에 러일전쟁 직전 제정러시아의 태평양정책을 부활시키려는 의지가 있었다. 그가 구상했던 동아시아의 전후 질서는 소련 주재 미국대사 해리먼(William Harriman)이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에게 보낸 기밀전문

(1944년 12월 15일)에 잘 나타나 있다. 전문에는 소련의 대일 참전 목적과 관련하여 스탈린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 회귀 시도가 잘 나타나 있었다. 미국대사의 보고에 따르면, 12월 14일 밤에 이루어진 스탈린과 해리먼의 회동에서, 스탈린이 옆방에서 지도를 들고나와 쿠릴열도와 사할린 남부는 반드시 러시아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스탈린은 이 문제를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후, 동청철도의 조차를 다시 거론했다. 해리먼이 만주의 어떤 노선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명시할 것을 요청하자, 스탈린은 다렌에서 하얼빈 그리고 서북쪽의 만저우리(滿洲里)와 동쪽의 블라디보스토크를 가리켰다. 해리먼이 그것이 만주에서 눈길을 끄는 유일한 철도 노선이나고 물었을 때, 스탈린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스탈린이 만주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간섭할 의향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영토를 팽창하지 않겠다는 카이로선언의 기본원칙 준수를 표명한 것이었으나, 해리먼은 철도 운용에 대한 통제 및 철도 보호를 위한 소련의 영향력이 당연히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경향은 한국 문제 처리에도 반영되었다. 이는 종전 후 일제의 한국 식민통치가 종식됨에 따라 소련 정부가 또다시 대한해협을 통한 자유항행권 보장을 매우 긴요한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소련이 한국의 주요 항구(부산, 진해, 제주도, 제물포)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소련 외무성의 1945년 9월 5일 자 ‘과거 일본의 식민지와 신탁통치 지역에 대한 제 문제’라는 문건에서는 상기 주요 항구들을 자국의 특별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는 거문도사건(1885~1887)을 거치면서 차르 정부가 한반도 남부 항구들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했기 때문이었다. 대한해협을 해양통로로서 안전하게 확보하고 중소 양국의 공동 관할하에

있던 뤼순과 블라디보스토크 상호 간에 용이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있어 부산, 진해, 제주도, 제물포의 항구들이 가진 중요성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바 있었다. 따라서 소련 정부는 유엔을 통해 관계 법령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는 소련 외상 몰로토프(Vyacheslav Molotov)가 소련, 미국, 영국 그리고 중국이 공동으로 대한해협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 국제협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1896년 방위조약과  
1950년 방위조약 간의  
차이점은 장춘철도와  
뤼순·다렌 문제였다.  
1945년 미국은 소련의  
태평양전쟁 참전  
조건으로 알타회담을  
통해 장춘철도와  
뤼순·다렌의 회복을  
약속했고, 이로써  
스탈린은 러일전쟁으로  
상실했던 철도와  
항구를 확보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1896년 방위조약과 1950년 방위조약 간의 차이점은 장춘(長春)철도와 뤼순·다렌 문제였다. 1945년 미국은 소련의 태평양전쟁 참전 조건으로 알타회담을 통해 장춘철도와 뤼순·다렌의 회복을 약속했고, 이로써 스탈린은 러일전쟁으로 상실했던 철도와 항구를 확보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동맹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소련은 중국으로부터 장춘철도와 뤼순·다렌에 대한 권리를 재확인 받지 못했다. 1950년 1월 26일 중국은 장춘철도와 뤼순·다렌항에 관한 협정을 소련 측에 전달하고 2년 내 동북의 모든 주권을 회수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차 동맹조약에서 청국 방위를 명목으로 동청철도 부설권과 뤼순·다렌을 조차했던 상황과 정반대로 제2차 동맹조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리품을 모두 반

환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소련의 스탈린이 중소동맹조약을 체결하면서 얻은 실익은 무엇이었을까? 소련이 태평양전쟁의 전리품을 중국에 돌려준 것은 태평양전쟁에서 흘린 피의 정당한 대가라 할 수 있는가?

#### 4.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빅딜: 한국전쟁

상술한 바와 같이 스탈린은 태평양전쟁을 러일전쟁의 리턴매치(return match)로 간주했다. 이는 소련의 당국자들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의 패전 원인을 잘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대한해협 문제는 터키해협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대외정책의 아킬레스건이었다. 터키해협을 봉쇄하면 흑해가 러시아에게 호수가 되는 것처럼, 대한해협이 봉쇄될 경우 동해 역시 호수가 될 뿐만 아니라 뤼순과 블라디보스토크 사이의 교통도 두절되기 때문이었다. 차르 정부의 태평양함대 사령관들이 마산포와 진해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고자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뤼순은 러시아 해군의 관점에서 결코 최선의 해군기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스탈린이 마오쩌둥과 중소동맹조약 관련 교섭과정에서 빅딜(big deal)을 단행하였던 이유도 뤼순·다렌의 전략적 가치를 직시했기 때문이었다. 1950년 1월 22일 스탈린은 뤼순·다렌, 장춘철도의 중국 반환 요구를 수용했다. 그 대가로 마오쩌둥은 린뱌오(林彪)의 제4야전군 내 1만 6,000명의 조선인 병사들로 1개 사단과 2개 연대로 조직하여 북한으로 파송하는 것을 수용해야 했다. 요컨대 스탈린은 한국전쟁을 통하여 뤼순·다렌을 포기하는 대신 대한해협의 자유항행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한반도 남부 항구를 원했던 것이다.

스탈린이 이러한 거래를 획책한 배경에는 애치슨(Dean G. Acheson)의 유명한 연설(1950. 1. 12)이 있었다. 미국이 그은 ‘불후퇴 방위선(the defensive perimeter)’ 안에 알류산열도, 일본 본도, 오키나와, 필리핀을 포함시키고 한국은 타이완과 함께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였다. 스탈린은 애치슨의 연설을 미국이 한국 방위에서 손을 떼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이 경우, 한국전쟁은 스탈린에게는 차르시대부터 염원해오던 한반도 남부의 부동산항을, 마오쩌둥에게는 뤼순·다렌과 장춘철도의 회수를, 그리고 김일성에게는 적화통일의 야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지 남는 게임’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는 오관이었다. 소련이 ‘불후퇴 방위선’을 오독했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일본의 안전이 본토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위해야 완성된다는 메이지(明治)시대의 주권선(主權線)과 이익선(利益線)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 개념은 시베리아 철도 완공 후 한반도의 부동산항 연결 시도가 야기할 한국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략이었다. 초대 총리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의 외교정략론(1890)에 정리된 이 개념은 강토(疆土)라는 주권선뿐만 아니라 이익선에 해당하는 한국까지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따라서 차르 정부의 마산

스탈린은 한국전쟁을 통하여 뤼순·다렌을 포기하는 대신 대한해협의 자유항행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한반도 남부 항구를 원했던 것이다.

---

## 포커스 I

포 점령 기도가 일본에 의해 무산되었듯이, 스탈린의 한반도 남부 항구에 대한 숙원 역시 일본 방위를 책임진 미국에 의해 저지되고 말았다.



**최덕규(崔惠圭, Choi, Deok-kyoo)**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사연구소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한제국 국제관계사 연구와 안중근의 하얼빈의거 관련 러시아 문서 수집 및 번역 발간사업을 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해외 소재 자료 수집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포커스 II

# 한중 관계 갈등·교류·협력

---

## 2023 한중 관계의 현황과 전망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 한국과 중국은 왜, 역사와 문화로 충돌할까?

김인희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사연구소장

---

## 인문교류, 경제·안보 연동 시대 한중 관계 개선의 해법

장호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2023 한중 관계의 현황과 전망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1. 문제의 제기

한중 양국은 40년에 걸친 반목을 청산하고 1992년 8월 24일 역사적 수교를 단행했고, 올해 31년을 맞았다. 이렇게 회복된 한중 관계는 전통적인 한중 관계, 한중 유대의 복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에는 양자 관계를 넘어서는 복합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최근 미중 전략 갈등과 중국의 한국에 대한 주도적 입장 인식,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 추세, 한미 동맹관계와 한중 협력관계의 차이, 북중 '특수관계' 및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 남북 관계 요소가 병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특수관계를 제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양국 관계는 전체적으로는 우호적이지만 영역별로는 불균형한 관계를 유지

한중 관계에는 양자 관계를 넘어서는 복합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최근 미중 전략 갈등과 중국의 한국에 대한 주도적 입장 인식,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 추세, 한미 동맹관계와 한중 협력관계의 차이, 북중 '특수 관계' 및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 남북 관계 요소가 병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경제가 우선이고 민감한 정치·안보 이슈는 이견으로 남겨두면서 발전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지향했고, 결국 국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최고조 갈등을 겪은 이래 여전히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중 관계 31년을 회고해 보면, 경제나 사회·문화 분야 등의 교류 등에 비해 정치·외교나 군사·안보 분야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전반적으로 경제·교역 분야가 '최대주의'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구축을 염두에 둔 정치·군사·안보 분야는 '최소주의'적 결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양국은 상호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해 올 초부터 국장급, 차관보, 외교장관 대화가 연속으로 이루어졌고, 아세안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李強) 중국 총리를,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한덕수 총리를 만나면서 상호 교류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제 새로운 한중 관계 형성을 위해 과거를 돌아보고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야 할 때다.

## 2.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중 관계의 흐름

한중 관계 31년, 양국은 한반도의 기본적인 현

상 인식에 존재하는 인식 차를 확인했다.

첫째, 한반도 통일에 대해 중국은 남북 쌍방의 협상에 의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만, 안보적으로 미국의 영향 하에 있는 한국적 현실을 고려해 ‘통일’보다는 ‘분단된 한반도’라는 현상 유지적 ‘안정’을 희망한다.

둘째, 북핵 문제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중국은 북한을 포함해 한반도 내에서의 핵 불용을 천명하면서도 북핵은 결코 제재와 압박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난색을 표하면서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중국은 한미동맹에 부정적 시각과 함께 한미일을 안보동맹으로 인식해 대중 봉쇄망의 일환으로 간주하면서 주한미군의 대중국 역할을 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당면한 사활적 안보 위협의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북핵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적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중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공언을 내세우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자국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한반도의 불안 정세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강대국의 ‘전략균형(strategic equilibrium)’ 훼손에 대한 우려로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나 한미일 삼각공조체제 구축도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으로 인식한다. 이는 북한 요인과 미중 갈등의 심화라는 연장선상에서 구조적인 인식 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하여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면서,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를 천명하고, 중국과는 상호 존중을

민주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등 서방이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할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군사·안보 영역에서 위기 관리 해결 메커니즘을 작동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상호 인식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이며 한중 관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강조하는 ‘당당한 외교’를 추구하자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 작년 1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발전 방향, 한반도 문제, 역내·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강화를 미국 대중 압박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 문제에서 ‘민주동맹’과 보조를 맞춰 중국을 견제하는 구도로 인식함을 다시 표출했다.

특히 중국은 한국 새 정부의 대외전략정책을 관망하면서 한국의 움직임이 자신들의 기대에 못미치자 압박 기조 강화를 놓고 저울질 중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등 서방이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군사·안보 영역에서 위기 관리 해결 메커니즘을 작동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상호 인식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이며 한중 관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새로운 다양한 현안을 양산하고 있어, 향후 만만찮은 예고된 갈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 3. 한중 관계의 지속과 변화

#### (1) 북핵·미사일

북한은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대남 직접 핵 공격을 제2의 사명으로 삼아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북핵 문제를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한미가 북한을 압박하는 형태로는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미중정상회담이나 한중정상회담에서 나온 북한 관련 사항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극도로 신중하게 관리하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물론 중국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역내 군사력 투사가 강화되어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손실로 이어질 것이므로 전략적 고민이 크다.

#### (2) 다자주의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은 2022년 12월 29일 ‘자유·평화·번영’을 3대 비전으로 하는 독자적인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당연히 중국은 이를 한국의 완전한 미국 ‘경사(傾斜)’라며 강력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식 다자주의 결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국의 중국 견제전략에 말려들고 있다고 인식한다. 작년 11월 16일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세계에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안정성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한 것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와 대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의 동조를 비판한 것이다.

#### (3) 경제 안보(economic security)와 공급망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 공급망 재편과 관련,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 포커스 II

### 한중 관계의 새로운 갈등요소

쟁점	양국 입장	해결(안)
북핵·미사일	한국: 북핵·미사일 고도화 지속, 위협 증대 중국: 북핵 보유는 한미의 대북 압박 때문	중국 역할에 대한 한중 직접 논의 필요
다자주의와 한국판 인·태 전략	한국: 중국을 '주요 협력 국가'로 명시 중국: 미국 중심의 소집단주의로 비판	한국의 다자주의에 대한 입장 설명 필요
경제 안보와 공급망	한국: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당연한 조치 중국: 소집단주의로 중국을 배제하는 견제전략	안정적 공급망 확보는 기술 한국에 필수
한미일 정상회의	한국: 점증하는 안보 위협 대처 중국: 아시안판 나토(NATO) 구축 시도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역지력 확보
타이완 요인의 대두	한국: 현상 변경 반대라는 국제주의 원칙 천명 중국: 핵심 이익인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배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는 국제주의 원칙
악화되는 국민 감정	한국: 중국의 일방적 압박 정책으로 초래 중국: 잘못된 언론 보도로 증폭	현실을 직시하는 본격적인 협의를 필요
북러 밀착	한국: 북러 군사협력은 사실상 한국 겨냥 조치 중국: 북러 군사협력과 일정한 선긋기	러시아의 대북 지원은 실질적 한국 적대정책

매우 부정적이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협의체인 칩4(CHIP4)는 중국을 기술적으로 고립시키려는 '기술패권주의'라며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또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와 한국·미국·일본·호주 등 14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경제협력체인 IPEF(Indian-Pacific Economic Framework)도 안보·경제 측면에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인식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한덕수 총리에게 한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위한 실질적 조치나 양자 교류 강화를 주문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 (4) 한미일 정상회의

올해 8월 18일 한미일이 정상회의를 열어 3국 협력의 방향을 명확히 하는 원칙(principle)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정신(spirit), 그리고 역내 공동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명문화 및 정치협력 의지와 실행방안을 강조하는 합의협약(commitment to consult) 등으로 안보협력을 제고하자, 중국의 불만은 최고조다. 중국은 쿼드와 오키우스(OUKUS)에 이어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아시안판 나토(NATO)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일 '합의'는 의무 조항인 나토 헌장 5조와는 다른 3자 협상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국의 인식은 비약이다.

#### (5) 타이완 요인의 대두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 회담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타이완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명시되자,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이후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타이완해협의 안정과 평화' 유지 문구가 계속 삽입되고 있다. 한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함에 변함이 없다면서 '어느 일방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반대'라는 국제주의 원칙 차원의 천명임을 강조하고 있다.

#### (6) 악화되는 국민 감정

2016년 사드사태 이후 진행된 중국의 압박은 결국 한국의 대중 감정 악화를 초래했다. 중국 정부는 부인하지만, 한국과의 교류를 제약하는 소위 한한령(限韓令)의 실존도 여전히 한국 국민의 대중 호감도를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해가 거듭될수록 한국인의 반중 정서는 강해지는 추세다.

---

## 포커스 II

여론조사에 따르면, 3년 전과 비교해 중국에 대한 긍정 인상은 절반으로 줄었고, 부정 인상은 20%p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전랑외교’로 대표되는 중국의 강압적 행태에 대한 반발과 중국 지도부의 거둬들인 사드 재처리 요구,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력의 무기화’ 등은 반중 정서 확장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 (7) 북러 밀착

지난 9월 13일 북러정상회담이 열렸다. 이에 북러 양국의 밀착과 더불어 새로운 북중러 구도의 연대 형성과 관련해 중국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만일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구축되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 장기화와 한미일을 겨냥한 북한의 안보 위협이 증대될 가능성이 커져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와 세계에 긴장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은 불문가지다. 북러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사항이므로, 서방 세계의 독자적인 대북·대러 추가 제재도 예상된다. 물론 중국은 북러 문제라며 군사협력 등에서 분명한 선을 긋고 있지만, 대미 연합전선 구축을 위한 연대는 중국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한미일, 북중러 구도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 4. 전망

외교는 상대가 있는 국제문제이며 생물이다. 미중 간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6월 블링컨(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이 방중하여 갈등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자라는 메시지가 나온 데 이어, 7월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 8월 러몬드(Gina Raimondo) 상무장관이 방중

해 ‘갈등 있는 대화’를 새로운 관계로 설정했다. 이미 북핵·미사일 실험은 상시화됐고, 경제안보가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뉴노멀(new normal)이 된 미중 간 전략경쟁은 국제정치를 규정하는 최대 요인이 되어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 북핵에 관해 표면적으로는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나 북한 정권의 붕괴를 야기하거나 북한이 중국을 적대국가로 인식하게 할 정도의 과도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전략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이 감내하는 안보 위협은 단순한 미중 관계의 부속물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한국은 북핵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보편 가치를 실현하는 세계적 모범국가의 국격을 갖추고자 한다. 한국의 첫째 목표가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있으므로 한국에게 협력 강화의 최우선은 적어도 중국 견제가 아니라 는 뜻이다. 한국은 이미 ‘한국판 인·태 전략’에서 중국을 주요 파트너로 규정해 적대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했다. 적어도 한국이 신냉전을 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천명한 것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한중 양국은 인식론 차원에서 새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작금의 불확실한 국제사회 현실에서 한국의 절

한국이 감내하는  
안보 위협은 단순한  
미중 관계의 부속물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양자  
차원의 문제부터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포커스 II

대적 과제는 안전보장이다. 특히 실질적 핵보유국인 북한과의 ‘핵 있는 평화(nuclear peace)’를 생각하면, 안보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방향성 확보 및 적극적인 역지력 구축은 필수다. 경제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역지 능력’ 동반 없이는 유연성 발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강(自強)이 생존과 발전의 첩경이다. 이 점에서 한중 관계도 일방적인 주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양자 차원의 문제부터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강준영(康竣榮, Kang, Jun-young)**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타이완 국립정치대학에서 현대 중국정치경제학으로 석·박사학위를 땀다. 중국 및 국제 관계 시사평론가로 국제지역연구센터장, HK+국가전략사업 단장을 맡고 있으며 중국 정치·외교 분야를 강의하고 있다. 외교부 및 대통령 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이며, 현대 중국정치경제 상황과 양안 관계 및 한중 관계가 주 연구분야로 『현대 한중관계의 이해』, 『중국의 정체성』 등 저서와 100여 편의 학술논문이 있다.

# 한국과 중국은 왜, 역사와 문화로 충돌할까?

김인희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사연구소장

## 1. 탈냉전과 한중 갈등의 시작

한국전쟁 이후 1992년 8월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기까지 한국과 중국은 공식적인 교류가 없었다. 교류가 없었으니 당연히 한중 간 역사·문화 갈등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중 간 역사·문화 갈등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냉전의 효과(?)라 할 수 있으며,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탈냉전이 가져온 필연적인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냉전시기를 제외하고 1992년 한중수교 이후 30년간 한중의 역사·문화 교류와 갈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문화 교류와 갈등을 중심으로 한중수교 30년을 살펴보면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장쩌민(江澤民)시기(1993~2003)로, 한중 간의 역사·문화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은 시기다. 그러나 갈등 요인이 잉태되고 있던 시기로 ‘잠재기’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K-POP)은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1990년대 말에 이르면 한국 문화에 의해 중국 문화가 잠식되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등장하였다. 혹자는 한류(韓流)를 한류(寒流)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이는 중국 문화시장이 한국 문화에 의해 점령당했음에 대한 우려였다.

2단계는 후진타오(胡錦濤)시기(2003~2013)로, 양국이 역사·문화 문제로 첨예하게 갈등하던 시기다. 수교 이후 축적되어 온 갈등요인은 표면화되어 사사건건 부딪혔다. 2004년 동북공정과 단오 논쟁이 시작된 이후 2008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2010년대 초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 잦아들게 되었다.

3단계는 시진핑(習近平)시기(2013~현재)로, 한중 간의 역사·문화 갈등이 한국사 전반, 한국 문화 전반으로 확대된 시기로, 갈등범위의 확장이라 할 수 있다.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2016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으나, 갈등 요인은 이미 시진핑 정부 초기부터 내재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시진핑 정부는 역사정책과 문화정책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2단계에 해당하는 2004년 동북공정과 단오 논쟁이 동시에 발생하였을 때 한국과 중국의 반응은 서로 달랐다. 한국이 동북공정에 분노했다면, 중국은 단오 소유권 문제에 분노했다. 2006년 이후 필자는 5년간 중국에 머물렀는데, ‘한국이 중국의 단오를 빼앗아 갔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이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의 반응에 분노하는 이는 만나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잘 알지 못했다. 반대현상이 한국에서 발견된다. 한국은 동북공정을 ‘중국이 고구려를 빼앗기 위한 역사프로젝트’로 이해했기 때문에 크게 분노하였다. 반면, 중국에서 단오

제 문제로 한국을 성토했다는 대규모 활동이 진행되었으나 이에 분노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그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당시 한국과 중국의 반응을 보면 특정 사실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특정 사실은 의도적으로 문제를 확대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문화 문제는 무시하고, 역사 문제에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 반대로 중국이 역사 문제는 무시하고, 문화 문제에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역사·문화 논쟁이 한중 양국의 현실정치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며, 향후 한중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한국과 중국의 반응을 보면 특정 사실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특정 사실은 의도적으로 문제를 확대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문화 문제는 무시하고, 역사 문제에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 반대로 중국이 역사 문제는 무시하고, 문화 문제에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

## 2. 역사 문제에 분노한 한국

중국이 동북공정을 실시하고 있음은 2003년 7월 15일 『중앙일보』의 「中 학계 ‘역사 빼앗기’ 대규모 프로젝트, 고구려를 중국사의 일부로」라는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한국 사회는 커다란 충격에 빠졌고, 정부와 학계 그리고 민간에서는 중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었다.

동북공정은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연

구중심(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이 동북 지역 3개 성과 연합하여 2002년 2월 5개년 계획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다. 주요 연구내용은 중국의 강역이론, 동북지방사, 동북민족사, 고조선·고구려·발해사, 한중관계사, 중국 동북 국경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 관계사, 한반도 정세 변화가 중국 동북 국경 지역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연구내용을 보면 중국 동북 지역의 역사, 민족사, 관계사, 변강사, 국제정치 등 다양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특히 분노했던 부분은 고구려사 관련 부분이었다.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동북공정은 ‘고구려사를 빼앗기 위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기획한 역사프로젝트’로 인식되었다.

그동안 한국 학계에서는 중국이 동북공정을 실시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에 의하면 “동북공정은 미래 중국 동북 지역에 발생할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라고 한다. 즉, 한국과 같은 핏줄인 조선족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한 정체성과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 간도 등 북방영토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중국이 위와 같은 점을 우려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다음 해인 1993년 중국 지린시(吉林市)에서 한국, 북한, 중국 학자가 참석한 고구려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당시 중국 학자 쑤진지(孫進己)와 경테화(耿鐵華)의 고구려사 관련 발표에 대해 북한 학자 박시형은 현재의 시각으로 역사를 규정한다며 단호하게 비판하였고, 한국 학자들도 이에 동조하였다. 그리고 일부 한국인들은 고구려 및 발해 유적을 답사하면서 고토 회복을 외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이 중국 정부를 자극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건들이 중국 정부가 동북공정을 실시한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없었다고 해도 중국은 동북공정을 실시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북공정은 중국 정부가 추진한 변강정책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이다.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라고 한다. 중화민족도 상상의 공동체다. 중화민족이란 말은 1902년 량치차오(梁啓超)가 처음 제안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중화민족은 실재하는 민족으로 상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은 한족과 다른 역사, 인종, 언어,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많은 민족은 국외에 자민족이 세운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조선족은 한국 및 북한과 동일민족이며, 몽골족은 몽골, 위구르족은 서아시아 지역의 ‘-스탄’이 들어간 국가들과 동일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전체 인구의 8.4%에 해당하는 소수민족이 63.7%의 영토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사막과 초원, 고산지대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소수민족 지역은 군사적인 측면의 안보, 경제적인 측면의 안보, 영토적인 차원의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 지역의 안보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다양한 민족정책을 실시하였다. 냉전시기에는 레닌(Vladimir Lenin)의 영향을 받아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실시해 왔다. 1980년대 중후반 개혁·개방 이후에는 소수민족의 이탈을 방지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중화민족에 대한 좀더 구체화된 개념이 제시된다. 장보취안(張博泉)은 ‘중화일체론’을 주장하였고, 페이샤오통(費孝通)은 ‘중화민족다원일체론’을 주장하였다. 이들 주장은 모두 “중국 내 56개 민족은 다양한 기원을 가지고 있으나, 교류를 통해 중화민족으로 일체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980년대 후반 냉전의 종식과 함께 소련이 해체되면서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변화를 겪게 된다. 중국 정부는 소련의 해체가 중국 소수민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중화민족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소수민족의 역사를 하나의 중화민족사로 편입하여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 역사프로젝트의 목적은 중국 내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이 스스로를 중화민족으로 상상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중화민족은 실제로는 한족을 의미하는 것이니 사실은 소수민족의 한족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북방공정은 몽골 접경지역에 대한 역사프로젝트로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였다. 서남공정은 티베트 지역에 대한 연구로 1986년 시작되었으며, 2008년부터 5년간 실시하였다. 남방공정은 베트남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로 1997년에 시작되었으며, 2008년부터 5년간 진행되었다. 서북공정은 신장웨이우얼 지역에 대한 연구로 2004년부터 5년간 실시되었다. 동북공정은 2002년에 시작되었으며 다른 역사프로젝트에 비해 늦게 시작된 편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동북공정은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의 이탈을 막기 위해 실시한 변강정책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중화민족 만들기 역사프로젝트는 오랫동안 역사적 공간을 공유해온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현재 영토 내에 건립되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중국사로 편입하고자 하였다. 한국인에게 있어 고구려는 역사상 가장 방대한 영토를 소유한 강대국으로 인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영문명인 코리아(Korea)의 전신이라는 점에서 정체성고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한국인은 동북공정 문제에 극도로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동북공정은 중

중국의 중화민족 만들기 역사프로젝트는 오랫동안 역사적 공간을 공유해온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현재 영토 내에 건립되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중국사로 편입하고자 하였다. 한국인에게 있어 고구려는 역사상 가장 방대한 영토를 소유한 강대국으로 인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영문명인 코리아(Korea)의 전신이라는 점에서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다.

국이 실시했던 여러 변강정책의 하나일 뿐이므로 중시되지 않았다.

### 3. 문화 문제에 분노한 중국

2004년 동북공정 논쟁이 한창이던 시기, 문화 분야에서는 단오 논쟁이 시작되었다. 단오 논쟁의 핵심은 ‘한국이 중국 단오를 빼앗아가려 한다’는 것이었다.

한중 간의 단오 논쟁은 당시 한국에 머물던 중국 학자가 중국 민속학회 부회장이던 우빙안(烏丙安) 교수에게 연락하면서 중국에 알려졌다. 우빙안은 이 사실을 중국 문화부에 알렸고, 지방신문과 인터뷰도 하였다. 단오 논쟁이 중국 사회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것은 『런민일보』가 「단오절은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이 되는가?」라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보도하였기 때문이다.<sup>1</sup>

최근 동북의 대학교수가 문화부 부부장 저우허핑(周和平)에게 긴급 안건을 보내왔는데 믿을 만한 소식이다. “아시아의 어느 국가에서 유네스코에 단오절을 자국의 문화유산으로 신청하려 준비 중인데, 현재 단오는 이미 그 국가의 유산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대표작’으로 신청할 것

1 劉玉琴, 「端午節將成爲外國文化遺產?」, 『人民日報』2004. 5. 6.

이라고 한다.” 얼마 전 열린 ‘중국민족 민간문화 보호프로젝트’ 회의에서 저우허핑은 초조하게 “유구한 역사를 가진 단오절은 중국의 전통명절인데, 만약 다른 나라에서 신청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난처해지겠는가? 우리는 무슨 얼굴로 조상님을 뵈 것인가?”라고 하였다.

이 보도로 인하여 중국인들에게 한국은 중국 문화를 빼앗아간 ‘문화도둑’ 이미지가 각인되었다. 단오에서 시작된 문화논쟁은 전통문화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동의보감』, 온돌, 활자인쇄술, 〈아리랑〉, 김장 등 한국이 문화유산을 신청하거나 등재할 때마다 중국에서 논란이 되었으며, 한국이 미리 앞을 내다보고 중국의 문화와 영토를 선점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짜뉴스의 온상은 광둥성(廣東省)의 작은 신문인 『신콰이보(新快報)』였다. 이 신문은 타이완 언론의 험한보도에 영향을 받아 2007~2008년 많은 가짜뉴스를 생산하였다.

초기 단오 논쟁은 우발적인 사건들과 오해로 시작되었다. 단오 논쟁에 빌미를 제공한 학자들은 필자의 지인으로, 이들이 악의적인 감정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런민일보』의 보도 후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런민일보』 보도 내용은 많은 부분이 오보로, 특히 “한국이 단오 신청에 성공하면 굴원(屈原)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은 명백한 오보다. 이 보도로 인해 중국인들은 한국도 단오 때 굴원에게 제사하며, 자신들의 조상을 빼앗기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이후 전개된 양상을 보면 중국 정부가 단오 논쟁의 확산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방정부는 한국을 대대적으로 성토했고 단오 보위전(保衛戰)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중앙정부는 급히 단오를 국가급 명절로 지정하고, 단오절이면 중국 텔레비전 방송은 현지를 연결하여 생방송하

문화사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류는 서구 가치관을 담고 있어 중국공산당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위협하였다.

문화산업적인 측면에서 한류는 중국 방송시장을 점령하여 시장의 위축을 가져왔다. ... 중국 정부는 단오 논쟁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한류가 중국 문화안전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곤 하였다. 중국 정부는 단오 논쟁이 오해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중국 단오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사실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단오 논쟁은 중국 정부가 주도 또는 방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단오 논쟁을 증폭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문화안전’과 관련이 있다. 문화안전은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문화사업은 중국공산당이 문화를 정치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산업은 이전에 없던 개념으로 후진타오 정부 이후 경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수교 이후 한국 문화는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분야에서 중국 문화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문화사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류는 서구 가치관을 담고 있어 중국공산당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위협하였다. 문화산업적인 측면에서 한류는 중국 방송시장을 점령하여 시장의 위축을 가져왔다. 이러한 두려움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 H.O.T.를 비롯한 케이팝에 대한 열광이었으며, 2005년 <대장금>의 중국 방영이었다. 중국 방송 관계자들은 한국 드라마가 오락적·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은연중에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도 침략하고 있으며, 국가의 문화안전을 위하여 한류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정부는 단오 논쟁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어, 한류가 중국 문화안전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 4. 역사·문화 갈등의 새로운 국면

동북공정은 역사 소유권 논쟁이었고, 단오 논쟁은 문화 소유권 논쟁이었다. 한국은 역사 문제에 분노했고, 중국은 문화 문제에 분노했다. 양국이 서로 다른 문제에 분노한 이유는 현실적인 정치·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다. 한국 입장에서 동북공정은 정체성이 훼손되는 심각한 사건이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다양하게 실시하는 변강정책의 일부로 중요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화 문제는 달랐다. 한류는 중국의 문화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따라서 논란을 확대하여 한류가 더 이상 중국 문화안전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위 두 논쟁은 모두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동북공정은 탈냉전시기 소수민족의 독립을 막기 위해 실시한 역사정책이었다. 단오 논쟁은 서구 문화와 사상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문화정책이었다. 그런데 시진핑 정부 이후 두 정책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중화민족공동체론’이란 새로운 민족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화민족공동체론과 기존의 ‘중화민족다원일체론’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근대 이전에 이미 중화민족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역사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측면에서도 한민족이 중화민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중화민족공동체론을 한국

고대사에 적용한다면 한중 간 역사논쟁은 다시 가열될 가능성이 있다.

문화 관련 시진핑 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인류운명공동체론’인데, 이는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지원하기 위해 제안한 문명담론이다. 서구 문명은 이미 가치를 다하였으니 중국적 가치로 세계가 단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공동체를 이끌 주인공은 중국이다. 그런데 인류운명공동체론은 고대 천하관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천하질서론’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인류운명공동체론은 천하질서관에 의해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설명하려 하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사드 한반도 배치 후 등장한 한국전쟁, 김치, 한복 논쟁 등은 모두 한국사나 한국 문화의 독자성을 폄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시진핑 정부 이후 중국이 역사와 문화를 국내외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는 것으로 보아, 향후 한중 간에 쉽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인희(金仁喜, Kim, In-hee)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사연구소장

중국 베이징 중앙민족대학에서 언어인류학을 공부했다. 필자의 학문적 관심은 인류학에서 출발하였으나 소수민족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구영역이 고고학 분야로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현대 중국의 민족정책과 역사정책의 핵심주제인 중국 애국주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소호씨 이야기』, 『1,300년 디아스포라, 고구려 유민』, 『치우, 오래된 역사병』, 『중국 애국주의 흥위병, 분노청년』이 있다.

## 인문교류, 경제·안보 연동 시대 한중 관계 개선의 해법

장호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지난 10월에 폐막한 항저우(杭州) 아시안게임에서 중국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외국 선수는 한국의 페이커(Faker, 이상혁)였다고 한다. 페이커를 보기 위해 입국장에 수많은 인파와 취재진이 몰렸고, 대회가 시작되자 LoL(리그 오브 레전드) 경기장 안팎에서 ‘FAKER’가 새겨진 셔츠를 입거나 피켓을 든 중국 청년들이 TV 화면에 많이 잡혔다. 정작 페이커는 출전하지 않았으나, 한국의 승리로 끝난 한국-중국 4강전 경기에서도 한국팀의 멋진 플레이에 박수가 쏟아졌다. 국가 간 대항전의 성격을 띤 아시안게임과 같은 행사에서, 그것도 한중수교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양국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중국 청년들이 한국 선수에게 열광하고 환호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작은 지엽적인 장면일 수도 있으나, 이 사례는 개인의 차원에서 볼 때 국적 또는 국가라는 범주와 팬덤 또는 취향이라는 범주

가 서로 교차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국민 개인 또는 각 영역 차원에서 일어나는 교류의 온도와 국가 차원에서 형성되는 국가 관계의 온도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닌 셈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역사·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음에도 이념과 체제가 다른 네 국가가 인접해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뚜렷하다. 동북아 4개국은 오랜 역사에 걸쳐 한자와 유교를 매개로 하여 하나의 문화권역을 형성하였으며, 그로 인해 문화적 공통분모가 크고 정서적 공감대도 넓다. 그러나 20세기 초반의 식민지 경험, 곧이어 발발한 한반도 전쟁, 70년 동안 지속된 군사적·이념적 대치, 중국 개혁·개방 이후의 경제적 연동성 심화 등 여러 요소가 얽혀 국가 간의 공식적 관계는 복잡다기하기 이를 데 없다. 특히 한반도 분단 상황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정세 변화는 한중 관계를 비롯한 역내 국가들의 대외관계를 매우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한중 관계는 바로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동북아 역내의 군사·안보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양자 관계의 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더구나 1992년 수교 이후 약 25년 동안 지속된 양국의 경제적 밀월관계도 사드(THAAD)

국민 개인 또는  
각 영역 차원에서  
일어나는 교류의  
온도와 국가 차원  
에서 형성되는 국가  
관계의 온도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닌  
셈이다.



중국인 팬이 페이커를 위해 2년 반 동안 그리고 한국까지 가져온 그림(페이커 인스타그램)

갈등과 한한령(限韓令) 사태를 겪으면서 현저히 약화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 산업구조와 양국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중 패권경쟁 구도가 동북아 무대에서 표면화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 배경으로 미중 패권경쟁이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재편과 맞물려 전개됨에 따라 전통적인 안보 영역과 경제 영역이 얽히는 이른바 경제·안보 연동체제가 확산하면서 한중 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있다.

‘신냉전’으로 부를 수 있을 만큼 국제사회에서 진영 간 대립이 격화하고 전쟁과 팬데믹(pandemic)의 영향으로 세계화가 퇴조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상황은 물론이거니와 현재의 경제·안보 연동체제 또한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과 중국 등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미국 주도하에 구축 중인 경제·안보 연동체제에 가담하거나,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가치동맹을 기치로 하여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 연동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측근 인물들로 당·국가 지도부를 구성한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정부 역시 미중 갈등구도에서 강경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드 갈등 이후 악화되고 있는 한중 관계가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악화일로에 있는 양국 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한중 인문교류를 논하는 것은 어쩌면 자가당착일 수도 있다. 국제정세와 양국의 정치상황에 따라 인적·문화적 교류의 통로가 열렸다가도 바로 닫힐 수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고, 신냉전의 세계 구도와 한중 양국 정부의 강경한 정책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 말이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바로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인문교류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 두드러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서로의 국익이 상치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라 양국 관계가 교착상태에 처해 있을 때 인문교류는 단절된 관계를 복원하거나 경

서로의 국익이 상치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라 양국 관계가 교착상태에 처해 있을 때 인문교류는 단절된 관계를 복원하거나 경색된 관계의 물꼬를 트는데 마중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색된 관계의 물꼬를 트는 데 마중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두 물길의 접점을, 서로 상치될 수도 있는 국익이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닌, 양국 국민의 공통된 관심사나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한 의제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 간의 인적·문화적 교류는 한중수교 이전에도 개별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교류의 플랫폼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한중수교 이후의 일이다. 양국 정부는 1994년에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교육, 학술, 문화, 예술, 영화, 출판, 청소년, 체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하고 ‘한중 문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차원에서 인적·문화적 교류를 주도하고 관리했다. 이후 2000년대 전반 ‘동북공정’과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등재 등에 따른 갈등이 불거졌지만, 양국 간의 인적·문화적 교류는 한류(韓流)와 한풍(漢風)을 타고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당시 양국 정부가 문화교류를 주요 협력 의제로 채택한 것은 대중문화 콘텐츠의 중국 및 해외 진출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중국의 세계진출(走出去)전략이라는 이해관계가 맞물린 데 따른 것이다.

경제적 교류·협력의 부산물 정도로 여기던 양국 간 인적·문화적 교류는 2000년대 후반 들어 그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었다. 2008년 양국 정부는 양국 관계를 비동맹국 간의 외교관계로서는 가장 높은 단계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공동성명을 통해 “인적·문화적 교류를 촉진”하자고 합의했다. 성명서에는 “양국 간 유구한 교류의 역사와 깊은 인적·문화적 유대를 바탕으로 교류를 폭넓게 진행함으로써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적인 감정을 심화”시켜 나갈 것을 명시했다. 한글 성명서의 ‘인적·문화적’이라는 표현은 중문 성명서에는 ‘인문’으로 표현되고 ‘인문교류(人文交流)’, ‘인문유대(人文紐帶)’와 같은 용어가 사용되었다.

경제교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던 당시 상황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인문교류가 양국 간의 공식적인 외교 어젠다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다.

인문유대와 인문교류의 플랫폼은 2013년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에서 큰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양국의 새 정부는 그해 6월 정상회담에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의 하나로 “양국민 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촉진하고 특히 인문유대 강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술, 청소년, 지방, 전통예능 등 분야에서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통해 양국 관계의 장기적·안정적 발전의 기반이 되는 양 국민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제고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아울러, 인문유대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협의기구로서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수립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오랜 역사에 걸쳐 축적된 양국의 문화적 공통분모와 공감대를 ‘인문’ 개념으로 수렴하고 구동존이(求同存異)의 틀에서 인문자산을 양국 관계의 질적 발전을 위한 외교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이 불거지기 전까지 3년 동안 한중 관계는 수교 이래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했다. 인문교류를 비롯한 여러 방면에 걸친 교류 활동도 크게 활성화되었다. 34개로 시작한 인문유대 강화사업 플랫폼은 3년 만인 2016년에 110여 개로 늘어났다. 양국 지방도시들 간의 결연관계 체결 건수도 꾸준히 늘어 560여 개에 달했으며, 양국 국민의 상호 방문도 절정을 이뤄 방한 중국인 수가 역대 최고치인 약 807만 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따른 양국의 갈등과 그에 뒤이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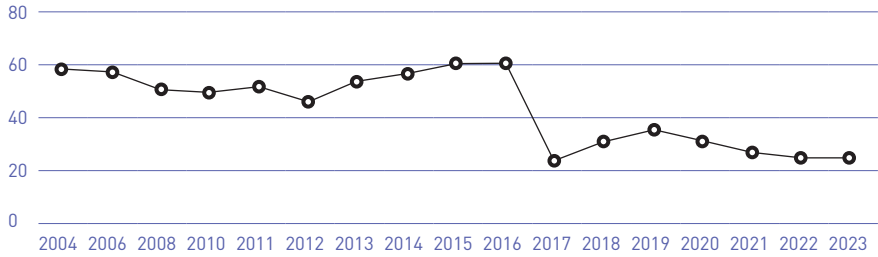
국의 한한령은 여러 영역에서의 교류를 급속하게 위축시켰다. 여기에 더해, 2020년부터 전세계적으로 창궐한 코로나19 팬데믹은 그나마 유지되던 양국 인문교류의 통로를 거의 막아버렸다. 미중 무역 갈등 국면에서 균형외교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중 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를 지정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한 왕래의 제한, 언론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사드 갈등으로 경색된 공식적인 한중 관계는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한중 관계의 ‘봄날’에도 역사나 문화유산을 둘러싸고 양국 국민 간에 날 선 비난이 오갔으나 서로에 대한 관심도나 호감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드 갈등 이후로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연히 증가했으며, 호감도 역시 가파르게 감소했다. 중국 내 혐한 정서도 그렇지만, 팬데믹 이후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더욱 두드러진다. 양국 간의 교류 활동이나 미담에 관한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고, 혐한이나 혐중 심리를 자극하거나 그에 편승하는 기사가 양국 언론매체에 넘쳐나고 있다. 자극적인 제목과 논조로 혐오를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 틀도 문제지만, 반중 또는 반한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양국 정계의 양태도 문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상대국 혐오 정서의 주된 소비층이 향후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10대와 20대라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 인식 및 호감도에 관한 국내외 여러 기관의 조사에서 수치를 통해 확연히 드러난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자세히 뜯어보면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모든 수치가 부정적인 방향만을 가리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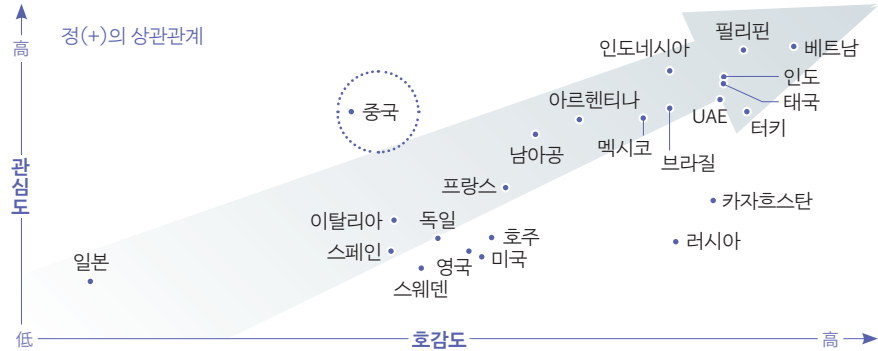
## 포커스 II

###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



EAI·한국리서치(2004~2016) 및 한국리서치(2017~2023) 조사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주요 국가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와 호감도



해외문화홍보원, 2022, 『2021년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 44쪽

### 연령대별 중국인의 한국 이미지 평가

연령대	긍정 (%)	보통 (%)	부정 (%)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 (%)
10대(61명)	34.4	52.5	13.1	남자 69.6
20대(108명)	59.3	28.7	12.0	여자 79.0
30대(134명)	86.6	10.4	3.0	10대 88.5
40대(127명)	73.2	17.3	9.4	20대 80.6
50대 이상(70명)	70.0	27.1	2.9	30대 79.9
				40대 64.6
				50대 이상 58.6

해외문화홍보원, 2022, 『2021년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 54쪽과 56쪽 자료 재편집

공식적인 양국 관계에 가려진 개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상대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교류의향은 여전히 크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문을 매개로 한 양국 국민의 교류가 미래지향적인 관계의 자양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셈이다.

것은 아니다. 상대국과 그 국민에 대한 호감도가 낮아진 것에 비해 관심도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기대하던 이익이 여러 일련의 갈등 사태를 거치면서 줄어들고 그에 따라 커진 실망이 낮은 호감도로 드러났지만, 서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상대국 방문 경험이 있거나 지인이 있는 경우 긍정적 답변의 비율이 높다는 점, 험한 정서의 주축인 중국 Z세대가 한국에 대해 높은 관심과 교류 의향을 표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공식적인 양국 관계에 가려진 개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상대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교류 의향은 여전히 크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문을 매개로 한 양국 국민의 교류가 미래지향적인 관계의 자양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교류 수요와 플랫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안보 연동체제에서 양국의 정치적 경색으로 인해 교류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드 갈등과 코로나 팬데믹을 거쳤지만, 양국의 인문교류 플랫폼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한중 인문유대 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차원에서 수많은 네트워크가 구

축되었으며, ‘한중 문화교류의 해’ 행사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이 더해져 현재는 약 160개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러 악재 속에서도 한중 지방도시 간 자매우호 결연 누적 건수도 2016년 560여 건에서 2022년 690건으로 증가했다. 한중 관계가 경색되고 반중 및 반한 정서가 만연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광범위한 교류 플랫폼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중국’이 대서특필되고 양국 주재 대사를 서로 초치하던 것과 달리,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행히 양국 관계 ‘정상화’ 노력에 관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제3국에서의 짧은 시간이지만 양국 외교 수장이 만나고 이후 전화를 통해 양국 교류 활성화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들리는가 하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경제부총리가 “‘탈중국’은 안 한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양국 또는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 개최 제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데 따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물론, 지금처럼 복잡하게 꼬인 한중 관계의 실타래를 푸는 데는 정상회담만큼 효과적인 방식은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경제·안보 연동체제가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념과 가치에 관한 언어가 국익에 관한 언어를 덮어버리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될지, 그리고 성사된다 해도 서로 윈윈하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찌 되었든, 2024년 상반기 몇 달간은 향후 10년 한중 관계의 향방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관계 개선 노력을 시사하는 최근의 움직임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치적인 चेस्처로 그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인문교류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문교류는 그동안 양국의 국내외 정치상황에 휘둘러 왔지만,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국익에 관

한 서로 다른 셈법으로 인해 교착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데 물꼬를 틀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통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오랜 교류의 역사를 거치며 형성된 문화적 공통분모와 정서적 친숙함을 제외하더라도, 한중수교 이후 30여 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광범위한 교류의 채널과 플랫폼이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백 개의 양국 지방도시 간 결연 네트워크와 백 수십 개에 달하는 인문교류 프로그램 등과 같은 교류 플랫폼은 양국 관계의 개선을 추진하는데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산이다. 정치적 담론과 혐오의 언어로 인해 쌓인 먼지만 걷어 내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널리 퍼져 있는 중국 청년들의 페이커와 BTS에 대한 팬덤, 중국 역사문화 유적지와 관광지에서 다시 길게 늘어서는 한국인들의 행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개개인의 차원에서 서로의 대중문화와 전통문화에 대한 수요와 교류 욕구가 여전히 광범위하다. 이념과 가치 차이라는 인식의 장막을 걷고 그러한 모습을 들여다보면,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양국은 온실가스 배출, 사막화와 황사, 황해의 수자원 다양성 문제

수백 개의 양국 지방도시 간 결연 네트워크와 백 수십 개에 달하는 인문 교류 프로그램 등과 같은 교류 플랫폼은 양국 관계의 개선을 추진하는데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산이다.

## 포커스 II

등과 같이 공동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해결해야 하는 많은 과제를 공유하고 있다. 공생·공영, 지속 가능한 발전 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와 닿아 있는 이런 의제는 양국의 정치상황이나 경제적 이해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하는 과제이다. 인터넷 블로그나 동영상 등을 통해 상호 혐오의 감정을 발산하던 양국의 청년세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생·공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상상일까?

이러한 인문교류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굳이 정치적인 부담이 크고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한 정상회담 개최를 전제로 할 필요도 없다. 어떤 면에서 인문교류 활성화는 양국 관계 개선 노력의 신호로 작용하여 정상회담을 추진하거나 고위층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는 데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기제가 될 수도 있다. 정상회담 등 고위층 채널을 통한 관계 개선방안을 추진함과 더불어, 아니 어쩌면 그러한 노력에 앞서, 기존에 구축된 교류 플랫폼을 재가동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장호준(張豪峻, Chang, Ho-jun)**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공부했으며,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국의 비공식경제, 모방·복제현상, 도시·농촌 문제, 민간사회조직, 평생교육체계, 한중 인문교류 등에 관한 여러 논문 및 연구서와 중국 사회문화 관련 교양서를 집필하였다. 중국 중앙민족대학 방문학자, 인천대학교 연구교수, 인차이나포럼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23년 현대중국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 중국의 역사정치와 한중 관계

신경진 중앙일보 베이징총국장

지난 7월 중순 단둥(丹東)을 찾았다. 마침 중국의 신방첩법[개정 반(反)간첩법]이 발효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긴장 속에 북중 국경도시를 둘러봤다. 주 목적지는 지난 2016년 첫 베이징 부임 이래 가보지 못했던 이른바 ‘항미원조기념관(抗美援朝紀念館)’이었다. 마침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이다.

그러나 적들이 금일 우리가 처하여 있는 엄중하고 위급한 형편을 리용해 우리에게 시간 여유를 주지 않고 계속 진공하여 38도선을 침공하게 되는 때에는 우리의 자체의 힘으로써는 이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특별한 원조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적군이 38도선 이북을 침공하게 될 때에는 약속한바와갓치 중국인민군의 직접 출동이 절대 필요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의견을 당신



김일성과 박헌영이 마오쩌둥에게 보낸 편지 사본(항미원조기념관 소장)

에게 제의하게 되오니 이에 대한 당신의 회답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일성, 박헌영(1950. 10. 1. 편지 원문 그대로)

전시실 초입에는 지난 1950년 김일성과 박헌영이 연명으로 마오쩌둥(毛澤東)에게 보낸 한글과 중국어 편지 사본이 전시돼 있었다. 지난 2021년 베이징 올림픽공원에 새로 문을 연 중국공산당 역사전람관에서 보았던 바로 그 편지였다.

편지 바로 위로 김일성이 ‘약속’대로 전쟁 개입을 요청하는 단락이 큰

중국어 활자로 걸려 있었다. 중국 관람객에게 전쟁 개입의 명분을 알리려는 듯했다. 편지 옆으로 마오쩌둥이 한국전쟁 개입을 알리는 수뇌부회의를 그린 기록화가 보였다. 김일성은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의 남침은 외면한 채 유엔군의 북진을 ‘침공’이라고 강조했다. 마오쩌둥에게 호소한 ‘특별한 원조’는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사용했던 용어인 ‘특수군사작전’이 떠올랐다.

이날 기념관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예매가 매진되어 헛걸음하는 방문객도 보였다. 기념관에는 한국전쟁을 겪지 못한 일반 중국인에게 미국을 향한 적개심, 북한을 향한 동병상련의 연민을 주입하기 위해 마련된 전쟁 상황과 유물이 세심하게 재현되어 있었다.

반면 한국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국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수교 협상 당시 한국 협상팀은 한국전쟁 개입에 대한 중국의 해명을 받아내지 못했다. 장루이제(張瑞杰) 본부대사는 사과도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6·25 조선전쟁이 일어난 다음 국경지대가 위협받았을 때 부득이 의용군을 파견한 것이다. 중국도 큰 피해를 입었다. 두 나라 관계 정상화를 토론하는 자리에 과거의 역사문제를 제기해 놓으면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은 자신의 생각이 있고 중국도 중국의 입장이 있어 논쟁을 하면 오래 지속될 것이며 제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한중관계 정상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한국일보』 2007. 8. 29

수교 공동성명에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명

기했지만, 중국은 한국전쟁 개입에 대한 사과 없이 두 개의 한반도를 관철시켰다. 지금껏 단둥시 잉화산(英華山) 정상에 세워진 기념관은 외눈으로 본 한국전쟁을 알리고 있다.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

중국의 국정 역사 교과서도 마찬가지다. 8학년(중2) 중국 역사 교과서 8쪽에는 “1950년 6월 25일 조선내전이 폭발했다. 미국 정부는 조선내전에 무장간섭하는 결정을 내리고 제7함대를 파견해 타이완해협을 침입했다. 1950년 10월 초 미군은 중국 정부의 재경고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38도선을 넘었고, 전쟁의 불길은 중조 국경을 태웠다”고 기술하고 있다. 김일성의 편지도 나온다. “1950년 10월 조선의 당과 정부 요청에 응해 중국의 당과 정부는 조선진입작전(入朝作戰)을 결정했다.” 정당한 개입이었다는 주장이다.

단둥에서 고속철도로 1시간 반 거리인 랴오닝(遼寧)의 중심도시 선양(瀋陽)도 한국전쟁을 둘러싼 역사정치적 핵심도시다. 1951년 처음 조성됐다는 이른바 ‘열사능원(烈士陵園)’을 찾았다. 이곳은 지난 2014년 한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취지로 돌려보낸 중국군 유해를 안치하면서 새롭게 재단장됐다. 능원 북쪽에 기념광장이 조성됐고, 전사자 이름을 새긴 검은 화강암 벽을 새롭게 둘렀다.

열사능원은 2014년 한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취지로 돌려보낸 중국군 유해를 안치하면서 새롭게 재단장됐다. 능원 북쪽에 기념광장이 조성됐고, 전사자 이름을 새긴 검은 화강암 벽을 새롭게 둘렀다.

렸다. 한국이 유해를 송환하기 전까지 중국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정전위로부터 인계받은 전사자 유해는 북한에 안장한 채 가져오지 않았다. 마오쩌둥의 아들 마오안잉(毛岸英)의 유해가 여전히 평양 남쪽 회창(檜倉)에 묻힌 이유다.

## 1. 안동복과 사라진 고려거리

4년 반 만에 찾아간 단둥은 시간이 멈춘 도시였다. 코로나19 기간 잦은 봉쇄와 북한과 교류를 중단한 탓이다. 택시 기사는 경제 부진에 연신 푸념을 쏟아냈다. 반면 북한 식당은 호황이었다. 중국 사장이 북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북한풍 식당이 압록강 철교 서쪽 강변으로 새로 들어서 있었다.

중국 여행객은 여전히 많다. 중국 내 소수민족 관광지마다 빠지지 않는 민족 복장 대여 사진점도 인기였다. 세련된 개량한복도 등장했다. 한복을 대여하는 사진점 이름도 서로 개성을 자랑했다. 과거 단둥의 옛 명칭인 안동에 ‘옷 복(服)’과 발음이 같은 ‘복(福)’을 붙인 안동복(安東福)이란 상호가 눈에 꼭 들어왔다. 처음에는 한복을 이제 ‘안동복’으로 바꿔 부르는 것 아닌가 오해를 할 뻔했을 정도다.

단둥 기차역 광장의 마오쩌둥 동상은 여전히 베이징 톈안먼(天安門)을 향해 한 손을 뻗치고 있었다. 과거 북중 교역상과 한국 식당이 밀집한 고려거리의 명패는 검게 가려져 있었다. 고려거리는 활기를 찾기 어려웠다.

무기력한 단둥 거리처럼 랴오닝(遼寧)·지린(吉林)·헤이룽장(黑龍江) 동북 3성은 중국 당국의 고민이다. 9월 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헤이룽장성 하얼빈(哈爾濱)시에서 동북전면진흥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



개량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신경진 촬영, 2023)

리에서 동북 경제 발전을 위해 교수나 박사 등 고급 인력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둥(廣東) 등 경제 발전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한다. 인재 유실을 막아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교육책을 불사할 정도로 동북은 위기다.

## 2. 국가박물관 지하의 역사지도

중국의 역사정치는 한국전쟁에서 멈추지 않는다. 지난해 9월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한중일 청동기전시회에 고구려와 발해가 빠진 연표를 단독 보도했다. 파장은 컸다. 중국은 연표를 내리는 방식으로 수

습했다. 당시 마오닝(毛寧) 외교부 대변인은 “학술 문제는 학술 영역에서 전문적인 토론과 소통을 진행할 수 있다. 양국 전시회 주관 부문이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유관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은 한국과 2004년 달성한 양해에 따라 역사와 현실을 구분하고 학술과 정치를 구분한다는 원칙으로 고구려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기를 원한다”고 대답했다. 잘못을 저지른 측의 해명으로는 구차했다. 역사와 현실, 학술과 정치를 구분한다는 중국의 원칙적 입장은 항상 말에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중국은 박물관 과잉 국가다. 현 중국 최고 지도자는 지방 시찰에서 박물관 점검을 즐긴다. 지방 지도자들이 박물관 정비에 열심인 이유다. 베이징 텐안먼광장 동쪽에 위치한 국가박물관은 지난 2012년 11월 시진핑 당 총서기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곳이다. 18기 정치국원을 대동해 ‘부흥의 길(復興之路)’ 전시회를 관람한 뒤 이른바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집권 공약을 발표했다.

이곳 지하 1층에는 선사시대부터 청대까지 유물을 ‘고대중국기본진열’이란 명칭으로 상설전시하고 있다. 올해 3월 찾아간 전시실 입구 벽면에 중국 역사지도 동영상이 심의번호 GS(2022)5166번 명칭으로 상영 중이었다. 후한의 강역은 황해도와 원산 지역을 차지했다. 신라의 삼국 통일(676) 전인 669년 당 지도에는 한강 이북을 고구려가 아닌 고려라는 이름으로 당과 같은 색깔로 그려 놓았다.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의 색깔도 당 영토로 표기했다. 660년 백제 멸망 후 신라가 아닌 당의 영토였다는 주장인 셈이다. 고구려는 진·한대에는 국내성, 위·촉·오 삼국, 남북조 시기에는 환도를 수도로 표기해 놓았다. 고구려는 당대로 넘어오면서 이름을 고려로 바꿔 표기했다.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로 탈바꿈하는 이른바 ‘일사양용

론(一史兩用論)’에 따라 국가박물관에서 버젓이 전시 중이란 의심을 사기 충분했다.

한국 고대사에 대한 횡포는 당 태종 이세민(李世民)의 소릉(昭陵)에서도 확인했다. 지난 2월 찾아간 소릉 입구 주차장에는 나당동맹을 체결했던 진덕여왕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신라 낙랑군왕 김진덕으로 시작하는 설명에는 “신라는 본래 변한의 먼 후손으로 한나라 낙랑군의 땅(지금 한국 동부)에 자리했다. 정관 5년 신라왕 김진평이 죽고 아들이 없자 국인이 그의 딸 김선덕을 왕으로 세웠다. 정관 9년(635) 당이 김선덕을 주국(柱國), 낙랑군왕, 신라왕에 책봉했다. 정관 19년(645) 당이 고려를 공격하니 신라는 병사 5만을 일으켜 응접했다. 정관 22년(648) 김선덕이 죽자 그 자매 김진덕을 세워 주국을 수여하고 낙랑군왕에 봉했다. 김진덕이 사신을 보내 내조하니 후하게 환영했다. 당 고종이 제위를 계승하니 김진덕은 비단에 오언시 <태평송>을 지어 헌사했다. 영휘 3년(652, 실제로는 654) 병으로 서거했다. 고종이 그를 애도했다”고 적혀 있다. 실제 1980년대에 소릉에서 진덕여왕의 석상 일부가 발굴된 바 있다. 진덕여왕도 아닌 김진덕이라는 이름의 조각상은 이웃 국가 역사에 대한 존중이 보이지 않았다.

중국은 당 제국의 재현을 꿈꾼다. 지난 5월 히

신라의 삼국통일 전인 669년 당 지도에는 한강 이북을 고구려가 아닌 고려라는 이름으로 당과 같은 색깔로 그려 놓았다.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의 색깔도 당 영토로 표기했다. 660년 백제 멸망 후 신라가 아닌 당의 영토였다는 주장인 셈이다.

로시마(廣島)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이 열릴 때 중국은 시안(西安)의 대당부용원(大唐芙蓉園)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불러 정상회의를 열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이니셔티브를 밀어붙이는 중국은 당 제국의 번영을 재현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중국의 꿈,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이라는 레토릭은 당시 중화질서의 재림과 다르지 않다.

### 3. 역사정치의 변주 ‘두 개의 결합’

한국전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과거 역사지도를 편의대로 그리는 중국의 역사정치는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최신 버전은 ‘두 개의 결합(兩個結合)’이다. 지난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연설에서 처음 나온 용어다.

‘두 개의 결합’은 도대체 무엇을 무엇과 결합한다는 말일까. 마르크스주의를 중국의 실제와 결합하고 다시 중국 전통문화와 결합한다는 말이다. 향후 2027년 열릴 제21차 당대회를 위한 포석까지 담은 의미심장한 용어다. 지난 2021년 시진핑 주석은 텐안먼 망루에 올라 이렇게 외쳤다.

새로운 여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을 견지하고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철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 기본원리를 중국의 구체적 실제와 결합하고, 중화 우수 전통문화와 결합을 견지하며, 마르크스주의를 이용해 시대를 관찰하고, 시대를 파악하고, 시대를 이끌며 당대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21세기 마르크스주의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인민일보』 2021. 7. 2. 2면

알기 쉽게 해석하자면, 지난 2017년 제19차 당대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붙인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장(黨章: 당헌법)에 기입한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제21차 당대회에서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반열인 ‘시진핑주의’로 높이겠다는 복선이다.

분위기 조성도 시작됐다. 지난 7월 24일 중국기자협회가 내외신 기자를 초대해 ‘중화민족 현대문명 건설’이라는 세미나를 주최했다. 싱광청(邢廣程) 중국역사연구원의 중국변강연구소 소장은 이날 이른바 양개결합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자 최대 보물”이라며 이렇게 설명했다.

5000여 년 중화문명의 깊은 기초 위에서 개척하고 발전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 기본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제와 중화의 우수 전통문화와 결합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탐색하는 가운데 얻은 규율성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취득한 성공의 최대 보물이다.

중국기자협회 세미나, 2023. 7. 24

올해 6월 2일 베이징 중국역사연구원에서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문화전승발전좌담회에 참석했다는 싱광청 소장은 두 개의 결합 중 두 번째 결합대상인 중화문명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중화문명은 연속성, 혁신성, 통일성, 포용성, 평화성을 가지고 있다며 새로운 버전의 중화사상을 설파했다.

이번 ‘양개결합’ 캠페인은 ‘새로운 문화사명(文化使命)’으로 이름 붙였다. 당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6월 5일 「새로운 문화사명」이라는 장문을 1, 3면에 실고 ‘시대의 필연’, ‘사상의 비약’, ‘문화의 자각’, ‘문명의 시작’이라는 수식어를 동원하며 시진핑사상 띄우기를 시작했다.

노림수는 마오쩌둥 추월이다. 1966년 일흔세 살인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중국 전통문화를 파괴했던 것과 달리 시진핑은 정반대 캠페인을 펼치겠다는 취지다. 홍콩의 『성도일보(星島日報)』는 지난 6월 7일 “첫 번째 결합이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 즉 마오쩌둥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었다면, 두 번째 결합은 시진핑 이론이 처음 하는 시도로 또 한 차례 사상해방의 수준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마오쩌둥이 일으킨 대규모 공자비판(批孔)운동과 달리 시진핑은 ‘홍색 신유가(紅色新儒家)’로 불릴 정도로 중국 전통문화 특히 공자가 창립한 유가학설(儒家學說)에 깊은 감정을 품고 있다”며 ““적음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지 못함을 근심하고 가난함을 걱정하지 않고 불안정을 근심한다”는 공자의 말이 ‘공동부유(共同富裕)’와 상통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시작됐다. 문화좌담회를 개최한 중국 역사연구원은 지난 2022년 8월 ‘명청시기 폐관쇄국 문제를 새롭게 탐구한다’는 논문을 개인이 아닌 과제조 명의로 학술지 『역사연구(歷史研究)』에 게재했다. 청 정부의 쇄국정책을 “당시 서방의 식민침략 위협에 직면해 취한 방어적인 자아 보호 책략”이라고 옹호했다. 논문이 나오자 국가 싱크탱크가 타이완 침공 후 예상되는 국제 제재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서구 언론 사이에서 제기됐다.

일본 영토 오키나와(沖繩)도 역사정치 소재로 등장했다. 시진핑 주석은 문화좌담회에 앞서 고적을 보관한 중국국가관본관 중앙총관을 시찰하며 “푸저우(福州) 근무 시절, 푸저우에 류큐관(琉球館: 류큐는 오키나와의 옛 지명), 류큐묘(琉球墓)가 있으며, 오키나와와 교류 연원이 매우 깊다는 것을 알았다”며 오키나와를 언급했고, 『인민일보』가 이 발언을 전했다. 한 달 뒤인 7월 초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 대표단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한

타마키 데니[玉城デニー, 본명 야스히로(康裕)] 오키나와 현 지사가 베이징 교외 통저우(通州)의 류큐 왕국 묘지 유적을 찾아 참배했다. 중국의 배려와 오키나와 현지 정치인의 이해가 현실외교로 되살아나고 있다.

가속화하는 중국의 역사정치는 ‘정통성의 적자’를 매우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치 지도자와 집권당을 1인 1표 자유선거로 선출하지 않는 중국은 늘 정통성의 적자에 시달린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할 정치인이 선출된다고 생각하는 중국인은 사실 많지 않다. 덩샤오핑은 정통성의 적자를 경제적 업적으로 대체했다. 정치학자들은 이를 ‘업적 정당성’이라고 설명한다.

문제는 업적 정당성이 경제 부진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코로나19 방역을 끝내면서 기대했던 리오프닝(re-opening) 효과가 미진하다. 역사정치는 업적 정당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장치다. 한국전쟁에서 미국을 이겼다는 신화를 재소환하고, 조공질서를 재조명하며, 쇄국정책을 정당화한다. 역사정치는 다른 모습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중국 역사를 마르크스주의에 접목시키는 ‘새로운 문화사명’이라

올해 코로나19 방역을 끝내면서 기대했던 리오프닝(re-opening) 효과가 미진하다. 역사정치는 업적 정당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장치다. 한국전쟁에서 미국을 이겼다는 신화를 재소환하고, 조공질서를 재조명하며, 쇄국정책을 정당화한다. 역사정치는 다른 모습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는 새로운 버전의 문화혁명이 시작됐다. 사상을 넘어선 시진핑주의 만들기에 해외 언론의 주목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 이사갈 수 없는 중국의 이웃이다. 이웃 중국이 한중수교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수교 후 3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양국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맞아 중국이라는 오래된 미래가 낯설게 다가온다. 치밀한 관찰과 대비가 필요할 때다.



신경진(申庚振, Shin, Kyung-jin)

중앙일보 베이징총국장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에서 『民國시대 縣長考試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창립 멤버이다. 2016년 1월~2020년 1월 중앙일보·JTBC 베이징특파원에 이어 2021년 1월부터 중앙일보 베이징총국장으로 '보고 싶은' 중국이 아닌 '보아야 할' 중국을 찾아 전하고 있다.

# 한중 따오기 교류의 현황

김성진 창녕군 관광환경국 우포생태따오기과

## 1. 동시 속 따오기의 복원

“보일듯이 보일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따옥따 옥 소리 처량한 소리”, 일제강점기 한민족의 정서를 노래한 동요 <따오기>의 앞 소절이다. 구한말 한반도 전역에서 쉽게 찾을 수 있던 따오기는 러시아 우수리스크(Ussuriisk), 중국, 한국, 일본, 대만에 걸쳐 분포하던 동북아시아의 철새로, 한반도에서는 북부 지역에서 번식하고 이동하여 남부 지방에서 월동했다. 주로 하천, 얇은 습지, 갯벌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반드시 마을이나 인가가 인접해 있는 산림의 나무를 잠자리로 활용했다.

동북아시아의 새 ‘따오기’는 1950년대 들어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1979년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관찰한 한 마리를 끝으로 멸종했고, 일본에서는 1981년 니가타(新潟)현 사도(佐渡)섬에 있던 야

동북아시아의 새  
‘따오기’는 1950년대  
들어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 되었다.

체험! 역사현장



1979년 한국 비무장지대의 마지막 따오기[아치볼드(G. W. Archbold) 박사 제공]



동요 속의 「따오기」 한국에 1마리뿐(『중앙일보』 1979.3.14)

생 따오기를 모두 포획하여 증식사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중국은 자국 내 생존하고 있는 야생 따오기를 찾기 위해 1979년부터 조사를 시작해 1981년 산시성(陝西省) 한중시(漢中市) 양현(洋縣)에 있는 야생 따오기 일곱 마리 중 다섯 마리를 포획해 증식사업에 성공했다. 현재 한국과 일본에 살고 있는 따오기는 모두 중국에서 도입한 것이며, 중국·일본·한국 순으로 따오기 복원사업을 추진해 성공했다.

혹자는 중국에서 도입하였다고 해서 중국산 따오기라 우리 것이 아니라는 이들도 있지만, 과거 동북아시아를 터전으로 살던 철새 따오기는 사람보다 더 넓은 영토를 고향으로 한다. 그러니, 비록 중국에서 따오기를 들여왔지만, 유전적으로나 전체 개체군으로 볼 때 중국·일본·한국의 따오기는 모두 동일한 혈통(종, species)의 동일 개체군이라 할 수 있다.

## 2. 따오기 복원을 위한 한중 교류의 시작

2005년 4월 한국교원대학교 김수일 교수 일행이 중국 산시성 한중시 양현을 방문해 따오기 서식지 생태조사를 시작함으로써 복원사업의 첫 물꼬를 트게 되었는데, 이는 민간 차원의 첫 교류였다. 당시 중국은 따오기 복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었고, 이미 야생에 따오기를 방사하여 상당수의 따오기가 야생에 서식하고 있었다. 이후 전문가의 제언과 환경단체의 도입 노력과 의지로 따오기 복원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던 창녕군이 복원사업 추진과 따오기 도입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2005년 9월 중국을 방문하였다. 군 관계자와 환경단체, 언론사로 구성된 대표단은 야생 따오기 서식현장 실사와 한중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대표단은 창녕군이 우포늪과 넓은 농경지가 있어 따오기 복원을

위한 좋은 서식환경을 갖추고는 있지만,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따오기의 도입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했다. 이에 환경단체가 중국 방문 결과와 창녕군의 따오기 복원사업에 대한 의지를 환경부에 전달하며 정부의 동참을 요구했다. 이듬해 2006년 4월과 6월에는 환경부, 전문가, 환경단체로 구성된 정부 공식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 따오기 전문가 교류와 한중시 양현 일대의 따오기 서식지 생태조사를 직접 추진하면서 공식적인 지원을 약속하여 한국의 따오기 복원사업에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2006년 4월과 6월에는 환경부, 전문가, 환경단체로 구성된 정부 공식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 따오기 전문가 교류와 한중시 양현 일대의 따오기 서식지 생태조사를 직접 추진하면서 공식적인 지원을 약속하여 한국의 따오기 복원사업에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당시 한국은 제10차 람사르(Ramsar)총회라는 국제행사 유치와 맞물려 지방정부인 경상남도에서도 따오기의 서식지인 습지(넓은 의미에서 논도 습지로 포함됨)를 복원하기 위해 따오기 복원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2006년 12월 경상남도, 창녕군, 환경단체, 언론사로 구성된 지방정부 대표단이 중국 산시성 한중시 양현을 방문해 당시 사육하고 있던 따오기 두 마리에 각각 ‘창녕’, ‘우포’라는 이름을 명명하였다. 그 후 매년 중국에 사육비를 지원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간 교류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지방정부로 이어진 따오기 복원사업과 관련한 교류 결과,



중국 산시성 한중시 양현 따오기복원센터 사육비 지원 현판식(2006. 12. 11)

왼쪽은 전 창녕군수, 오른쪽은 전 한중시 부시장

2008년 5월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우호적 외교를 위해 당시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한국에 따오기 한 쌍을 기증하기로 약속했다. 환경부(사육시설 예산 지원 및 국제법 관련 도입 절차), 문화재청(사료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검역 절차 지원), 경상남도(복원사업 지원), 창녕군(따오기 사육, 증식, 방사 등 복원사업 전반)이 따오기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해 10월 17일 양저우(양), 룡팅(우)이라는 따오기 한 쌍을 도입하면서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따오기 복원사업을 시작했다.

### 3. 따오기를 통한 우호교류

한국 멸종위기야생동물 복원사업은 2000년대 초 반달가슴곰을 시작으로 황새, 따오기, 두루미, 붉은여우로 이어졌는데, 당시 국내의 복원사업은 걸음마 단계였기 때문에 관련 정보와 정확한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실정이었다. 창녕군은 2008년부터 따오기 복원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따오기 복원사업을 했던 중국, 일본과의 교류가 무엇보다 필요했다.

창녕군은 2008년 따오기 도입 이후 중국 따오기 사육사 두 명의 기술 지원을 받아 인공증식사업을 시작했고 일반적인 사육 관리부터 번식기 특별관리까지 모두 중국의 기술 지원이 있었다. 약 1년간의 중국 기술 지원이 있는 후 인공증식기술의 기본기를 확보했지만,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중국과의 사육기술 교류는 한국에서 따오기 첫 야생방사를 하기 전까지 계속 이루어졌다.

창녕군은 따오기 도입 이듬해인 2009년부터 따오기 인공증식사업을 통해 한 쌍으로부터 새끼 네 마리를 증식하는 데 성공한다. 이후 2010년 여섯 마리, 2011년 다섯 마리, 2012년 일곱 마리를 증식하였지만, 증식에 성공한 대부분의 새끼가 암컷이어서 수컷의 수가 부족해 중국에서 도입한 따오기 한 쌍 이외에 번식쌍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근처 교배에 따른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번식쌍을 추가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창녕군에서 복원하는 따오기 개체군 내에 열성 유전자의 세대 교번이 계속 늘어나 장기적으로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결국 중국에서 따오기를 추가 도입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국내

따오기  
국제심포지엄은  
한중일 3국의  
복원사업 실무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정부 중심의  
새로운 우호교류를  
여는 의미 있는 행사로  
발전해 나갔다.  
이에 발맞춰 중국의  
민간단체인 산시성  
인민우호협회가  
발족한 한중일  
따오기 국제포럼을  
통해 각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교류하는  
사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2013년 6월 중국에서 개최한 한중정상회담에 따오기 추가 도입을 의제로 반영해 달라고 환경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 결과 2013년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국가임업국과 한국의 환경부가 따오기 추가 기증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3년 12월 23일 수컷 따오기 두 마리(바이스, 진수이)를 중국에서 기증받아 이듬해 2014년부터는 총 네 쌍의 번식쌍을 데리고 따오기 인공증식사업에 속도를 올리게 시작했다.

한중정상회담을 통한 우호적 외교의 상징으로 두 번에 걸쳐 네 마리의 따오기를 중국에서 기증 받으며 교류는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다. 2014년 중국 저장성(浙江省) 항저우시(杭州市) 더칭현(德清縣)에서 개최한 한국, 중국,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제3차 철새양자회의를 앞두고 처음으로 한중일 따오기 국제심포지엄을 중국의 요청으로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창녕군은 심포지엄을 정례화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중국 임업국 관계자가 한중일 따오기 국제심포지엄 정례화와 더불어 3국이 순환 개최하자고 화답했고, 일본 환경성도 이에 동참했다. 이때 심포지엄은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따오기 복원사업 실무자

## 체험! 역사현장

및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복원과 관련한 기술정보를 교류하고 각국 복원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알리는 목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순환 개최할 것을 약속했다. 제2회 한중일 따오기 국제심포지엄은 2016년 일본 니가타현에서 열렸다.

한국은 2019년 따오기 첫 야생방사행사와 더불어 제3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중국, 일본의 실무자, 전문가로부터 한국의 따오기 복원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찬사를 받았다. 따오기 국제심포지엄은 한중일 3국의 복원사업 실무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정부 중심의 새로운 우호교류를 여는 의미 있는 행사로 발전해 나갔다. 이에 발맞춰 중국의 민간단체인 산시성 인민우호협회가 발족한 한중일 따오기 국제포럼을 통해 각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교류하는 사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2020년 코로나19의 발생으로 따오기 국제심포지엄과 따오기 국제포럼이 현재까지 잠정 중단되었지만, 한중일 3국의 따오기 복원사업을 통해 우호적 교류가 다시 이어져 따오기가 동북아시아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길 희망한다.



**김성진(金盛珍, Kim, Sung-jin)**

창녕군 관광환경국 우포생태따오기과

동아대학교에서 이학박사를 받았다. 국립공원연구원 조류연구센터에서 철새 이동경로 관련 연구를 했고, 창녕군 우포따오기복원센터에서 따오기 사육, 야생방사 업무를 거쳐 현재 대외 교류,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조류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 Message from the Editor-in-Chief Kim, Hyun-chul

### Guest Essay

#### From the Middle Ground to the Third Pole: China's Self-Perception and Foreign Policy after the Korean War Armistice

Yu, Yong-tae

#### Assessing Korea-China Relations in the New U.S.-China Dynamics: With a Focus on the Formation,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of the 'Korea Model'

Shi, Yuanhua

### Focus I

####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 The U.S.-China Rivalry, New Reg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Park, Ihn-hwi

#### New China-Japan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Mutual Perceptions of 'China Revival' and 'Japan Revival'

Cha, Jae-bok

#### China-Russia Relations and the Korean Peninsula

Choi, Deok-kyoo

### Focus II

#### Rivalry, Exchange and Cooperation in Korea-China Relations

####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Korea-China Bilateral Relations in 2023

Kang, Jun-young

#### Why Do Korea and China Collide over History and Culture?

Kim, In-hee

####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Korea-China Relations in the Era of Humanities Exchange and Economic Security Connectivity

Chang, Ho-jun

### Field Reports

#### China's Politicization of History and Its Impact on Korea-China Relations

Shin, Kyung-jin

### Experience Historical Sites

#### Current Status of Korea-China Exchanges over the Winter Migratory Bird, Ibis

Kim, Sung-jin